第250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1 號

國 會 事 務 處

2004年11月16日(火) 午前 00時

議事日程

1. 경제에관한질문(계속)
2. 정치에관한질문(계속)

附議된案件

1. 경제에관한질문(계속) …… 1
2. 정치에관한질문(계속) …… 34
o 의사진행의건 …… 43
2. 정치에관한질문(계속) …… 44
o 의원신상발언 …… 55
2. 정치에관한질문(계속) …… 57
o 의사진행의건 …… 78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80

(0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희태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계속)

○부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권경석 의원, 이틀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권경석 의원 마지막 질문을 금방 마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17대뿐만 아니라 의정 사상 최초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8 대 2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 조세 수입의 약 56%가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 및 지방의 신세원 발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세를 어떠한 형태로 새로 만들어도 전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지방세에 맞는 재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소득세의 지방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배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의원 바로 부총리의 답변을 저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밑에 있는 기초 세율은 지방세로 그냥 두고 위의 누진 부분은 국세로 이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세에 보면 지방교육세, 그다음 농특세, 부가세로 붙어서 국세로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그렇게 해 주

시지요.

○권경석 의원 바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권한만 주고 재원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가 무슨 자치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임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기금 관련 계획을 짠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재정에서의 투자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재정투자 규모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투자 규모와 외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경석 의원 저는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나 예산은 5년 단위의 정부 재정중기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다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사업계획을 보고 심의를 하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저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다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착된 관행이고 그대로 또 계속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48초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건교부장관께 드릴 질문, 이것은 제가 정책자료집 낸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지금 질문서 안에 페이지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예.

○권경석 의원 정책자료도 있고 질문서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석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이틀째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 20초 초과되더라도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무한경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고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로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논쟁에 우리는 시간과 정력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지도층과 국민들이 총력을 기울여도 어려운 이 시기에 분열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파국을 자초할 뿐입니다.

이 정권의 위정자들은 더 이상 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살림꾼으로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며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시켜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희태 권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8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그러면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은 차관의 대리 출석을 각각 승인하였고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교섭조정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안경률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경쟁력으로 승부를 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수없이 개혁을 외쳤는데도 왜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까? 또 각종 경제지표는 왜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1년 8개월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사상 초유의 20% 지지율이 말해 주듯이 민생파탄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좀 잠잠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노 대통령의 막말 증세가 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LA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에서 노 대통령은 핵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옹호하고 그래서 한미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14일에는 교포간담회에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한국 제일의 무법자는 대통령, 무법자가 야바위한다는 등 일국의 국가원수로서는 극히 부끄러운 비속어를 남발해서 국가 체면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호황이고,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기업들이라고 했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신용불량, 파산으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절망 상태인 우리 청년들, 참다 못해 거리로 나와 솥뚜껑까지 내팽개쳐야 하는 자영업자들, 파탄지경인 서민경제가 대통령께는 한낱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합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에 따른 기업인의 의욕상실 때문입니다.

전국 8대 도시의 신설된 법인 수를 보면 2000년 4만 2000개에서 2003년에 3만 3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20세기 초의 개척자 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자는 이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작년 2월부터 단돈 1엔만 있으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1엔 창업제도'를 도입해서 1년 6개월 만에 1만 5000개의 소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법상 5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자본금 규정을 한시적이라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지금 상법에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5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벤처와 창업육성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식회사제도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의원 다음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연결 재무제표 등 회계의 투명성을 전제로 해서 시장에 맡기고 또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최근에 해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2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격 폐지한 바 있는데 우리도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의가 있으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출자총액제한제도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께 논의를 계속하는 계기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존폐 여부를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시장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완화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해 온 완화안이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더 보완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은 대외적인 관계나 신인도 문제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경률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회계의 투명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열린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국제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참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해서 외자 유치 비중이 높을수록 예상보다 더 빨리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외자 유치 실적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데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M&A 투자 비중은 2001년에 16.9%에서 금년에는 48%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갈수록 외국인 투자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중에서 제조업 비중은 85%에 이르러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등은 지금 완전히 고사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산업 공동화를 막고 양질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지만 부산과 광양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한 1억 3000만 불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인천의 144억 5000만 불의 한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름만 경제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외자를 유치하고 지방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저희가 인천하고 부산, 광양 세 군데에 경제자유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에 가깝고 공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이나 광양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항으로서의 특성 이외에는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광양의 배후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한 경제특구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기업의 전용단지를 허용하고 기업도시를 같이 지정하는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외자 유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 나서서 해운물류기지와 해운사들을 적극 유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운사와 물류 기업의 본부를 부산특구에 유치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예.

○안경률 의원 지난 10월에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성장경쟁력이 작년보다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세계 2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국제기관의 경쟁력 평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해외 조달 자금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목표와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또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 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로써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의원 부총리께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각 부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죽 들어 보고, 또 이 나라의 살 길이 결국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리 산하보다도 대통령 산하에서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예.

○안경률 의원 휘발유세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휘발유의 유류세 비중은 소비자 가격의 63.6%나 차지해서 이웃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유가 시대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단기적으로라도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현재보다 한 10% 이상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 그만큼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매년 기름값이 싸면 싼 대로 에너지 절약을 등한히 하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부담을 덜어 준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원 단위가 일본의 3배 이상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컨틴젠시 플랜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 주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유가의 수준이 구조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는 어느 나라나 가격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격구조를 보면 세금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가격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가 GDP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과학기술부차관 최석식 2002년 기준으로 GDP 대비 2.53%입니다.

○안경률 의원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과학기술부차관 최석식 미국에 비해서는 약 17분의 1 정도 됩니다.

○안경률 의원 절대 규모는 작지만 그런대로 많은 R&D 예산을 현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부차관 최석식 예.

○안경률 의원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기술 도입액이 91억 4000여 만 불인데 기술 수출액은 한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교역 적자가 총 76억 8000여만 불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R&D 투자가 비효율적이다 하는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R&D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지만 효율성을 좀더 제고해서 기술교역의 적자를 시급히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부차관 최석식 기술교역 지수가 이렇게 열악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R&D 투자의 효율성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 투자는 일정 규모가 축적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발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구개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축적된 기반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 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더 큰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발전 목표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또한 역점을 두어서 빨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정부에서 관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실용화가 구체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결국 R&D는 과학기술자들의 정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경제적 사회적 대우도 향상시키는 노력

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술교역 지수도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부차관 최석식 감사합니다.

○안경률 의원 다음 산업자원부장관님!

우리의 경쟁력은 수출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성장을 홀로 이끌고 있는 수출은 지난 10월달에 2000억 불을 달성해서 세계 제1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8%에 머무르고 있고 하반기에는 IT 부진과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급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은 작년 기준으로 총 수출액의 약 60%가 중국, 일본, 미국 등 10대 수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서 KOTRA 등 관련 전문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BRICs 4개국의 중요성은 세계 경제 중의 비중이라든지 또 우리와의 교역 비중 등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의 수출이 2.4배가 늘었고 우리 전체 수출 중에 비중이 20.6%가 됩니다. 초기 시장 개척 과정에서 KOTRA라든지 수출 지원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KOTRA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 사업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진출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지역의 KOTRA 인원이 약 40% 정도 늘고 무역관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에서 이 지역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률 의원 차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출에 관한 한 일본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JETRO를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내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에 있는 무역대표부(USTR)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대외 통상 조직의 개편에 관한 것은 통상 환경 전반에 대한 적시 대응, 또 통상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국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와 같은 통상교섭본부 체제하에서도 효율적인 대외 통상 교섭 활동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수출 확대라든지 투자·교류 활성화 등 통상진흥 활동은 산자부 등 각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통상정책과 관련된 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재경부, 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설된 대외경제위원회기획단—그 기획단장은 산자부 차관보가 겸하고 있습니다—을 설립했고 앞으로 통상교섭본부와 원활히 협조해서 대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경률 의원 대답이 너무 밋밋해서 반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OECD 국가를 포함한 36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2002년에는 9위에서 금년에는 12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이나 상품의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총리실 산하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위원장이 총리가 되시겠습니다—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는 상품 브랜드, 또 문화관광부는 문화상품 브랜드, 또 해외홍보처 등 범부처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국가 이미지 홍보와 연계한 상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 산업의 기술 수준을 보여 주는 '세계 일류 상품전' 전시회를 한류 콘서트 등과 같은 문화행사와 함께 개최

해서 국가 브랜드 홍보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날' 등과 같은 현지국에 한국 관련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해수부장관과 아마 지금 두 번째 본회의에서 설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에서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한다 하는 그런 투포트 시스템을 항만 개발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최근에 이 정책의 허구성이 점차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광양항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당초 2011년까지 930만TEU로 되어 있는 광양항의 예상 물동량은 과잉 추정된 것이다." 이렇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항이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 예.

○안경률 의원 그런데 실제 지난 7년 동안 부산신항 예산은 전체 항만 개발 예산의 한 18.4%밖에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만물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포트 시스템 정책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양항의 물동량이 당초 예측치보다는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개장 이후를 죽 보면 연평균 20%가 넘는 물동량 증가율을 시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광양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은 북중국 관련 화물로서 북중국 화물의 경우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이런 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도로, 철도 등 배후교통망을 완비를 하고 항만 배후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항만 성장 여건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잘 될 경우에 광양항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집중 개발해 동북아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의 경우 부산신항 투자는 지금 재정에서 4482억 원, 광양항의 경우는 2735억 원, 그래서 부산항의 경우 공사비는 기술가능한 최대 수준, 그리고 보상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부산항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안경률 의원 그래서 부산항도 개발하고 광양항도 개발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 예, 광양항을 같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률 의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특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양항 정책이 85년부터 죽 국가정책으로 추진을 해 왔고 최근에 들어서 국가 물류중심 체제 건설을 위해서는 경부 축에 집중된 내륙운송체계를 분산해 가지고 양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중국은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연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경제 강국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일본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용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시대 역행적인 이데올로기 대결에 집착하면서 대중적 인기몰이식 경제정책을 남발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다수 좌파 정부들이 역사의 유물로 변해 버린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앞다투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이때, 아직도 사회주의 향수에 젖어 있는 일부 수구 좌파 세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개혁을 빙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4대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와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자유주의·반시장경제적 악법이자 노 정권의 좌파 고백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의 코드주의, 남 탓하기, 증오심 키우기, 헌법 무시 등의 행태는 마치 1925년 트로츠

키가 영국의 노동계를 선동하면서 “적을 만들어라” “적과 동지를 식별하라” “보수 언론을 경계하라” “법과 원칙은 탁상공론이다”라고 한 주장과 내용이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노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시대 역행적인 좌파 실험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진보는 없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세계가 지향하는 21세기 시대정신은 바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경쟁력만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경쟁력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포천·연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국민 분열로 인해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분열의 폐해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으며 국민들의 영혼마저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다중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은 남북으로, 대한민국은 동서로, 이제는 각 지역이 모두 제각각으로 공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아우성입니다. 사안마다 국민이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밖의 시위는 자신들의 요구를 호소하는 것이지만, 그러기에 다양한 모습의 몸부림이 있다고 해도 국회는 이를 잘 수용해서 말로, 논리로, 정책과 법으로 정치화하는 장입니다. 그러기에 국회를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인 저는 국회의원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뽑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막하는 사람도 뽑힌다는 것을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 깡패들이 싸움을 걸 때면 항상 “왜 째려봐!”, “왜 반말이야!”, “왜 어깨에 힘을 줘!”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국회의사당의 싸움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정부질문 자체가 불필요함까지 거론될 정도로 대정부질문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원은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잘못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국회 운영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장을 난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에 위협이 된다고 믿는 한 우리는 상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협력하라고 여로 또는 야로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대 국회가 보여 주는 모습은 이런 국민의 바람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상대를 자극하는 말을 삼가고 논리와 정책으로 경쟁하는 의정 단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기에 인간은 정치라는 생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인은 갈등의 조정자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사회나 갈등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 인간사의 기본 바탕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정책 결정이 효율성 위주로, 좀 비민주적으로 결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잘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

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이 토론하고 연구를 죽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서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갈등 관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고 또 갈등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 조정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능력을 교육도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노동쟁의도 사용주와 노조가 직접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변호사들 간에 타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감정이 생기면 똑같은 내용도 타협이 안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완충역할을 해서 타협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바로 그런 점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경제개발과 물질 수준의 상승으로 사회가 복잡해진 반면 정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물질적 빈곤이 갈등의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는 그간의 우리 역사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통합의 국정철학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참여정부의 큰 국정지표 중의 하나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인 과거의 사고로는 이것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고 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오해를 불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여정부 국정철학의 큰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금방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관행을 쌓아 나가고 서로 의식이 좀 바뀌고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자리잡아 가리라고 봅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국민 대통합 혹은 대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제가 사회의 이분법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도 선거를 치를수록 최근에는 더 심각한 이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서구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통합유럽을 만들 정도로 성숙해 있습니다.

1만 불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개발경제를 이끄는 데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1만 불 이상의 시대가 되면, 특히 소비 수준이 2만 불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는 데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화합과 통일사회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대통령제하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1년 반 조금 지났고 앞으로도 임기가 3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도 약 3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벌써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사회가 더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제하에서 갈등이 심했던 것은 독재시대에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고 또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사실 그만한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에 별로 없고 민주적으로 정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옛날식 관습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갈 일이라고 보고 현시점에서의 권력구조 개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는 견제와 협조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교부의 개발사업이 환경부에 의해서 노(No)라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 협조만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부서가 타당성 조사와 설계·시공까지 모두 진행하는 현재의 이러한 턴키 방식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는 계속적인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 간의 견제가 없으니까 정부와 국민이 바로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부처 간의 협조만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국정현안조정회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에는 1주일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개 안건을 1주일에 4건 내지 5건은 처리할 것입니다.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조정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고 다섯 분의, 부총리와 책임장관회의도 또 각 분야별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서로 이견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국가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어떤 때에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부처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사안은 일곱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마침내 2, 3일 전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우리 정부 내에 민주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40년 개발경제의 주역이었던 공기업들이 엄청난 조직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사회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대기업들도 IMF를 통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세계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경제적 비효율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경영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예, 그랬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 공사 사장이 지금 사업과 관련한 뇌물죄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예.

○이철우 의원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언론의 보도내용을 봐서 한탄강댐사업과 관련해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렇습니다. 2002년도 한탄강댐 사업 타당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동안 수자원공사 사장은 건설수주를 통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얼마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거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주무장관으로서 저희 산하 공기업에 그런 도덕적인 큰 문제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에서는 기존 한탄강댐 백지화 의견을 내고 새로운 홍수 조절을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의원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한탄강댐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되풀이되던 임진강 유역의 홍수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9개월에 걸쳐서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그런 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당초의 규모를 줄이고 또 댐 외에 하천변에 저류지를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찬반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승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한탄강댐은 주민들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탄강댐은 이미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홍수 조절 전용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라는 명제 앞에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갔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좌우될 정도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을 받을 때만 중앙정부를 필요로 하지 국가정책과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반정부 활동까지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자치단체와 어떤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이럴진대 국민들은 모든 잘못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돌리고 전국 243개 지자체는 저마다 축제, 잔치, 행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많은 행사들이 선심성이거나 단체장 얼굴 알리기를 위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지역의 낙후한 기반시설 투자나 그 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김병일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낙후시설 투자라든지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철우 의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상당한 국가적 낭비가 일어나고 이는 균형 발전, 지방화시대라는 구조 속에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생색은 단체장이 내고 잘못되면 중앙정부 탓을 서슴지 않는 지자체의 자화상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예산배분과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김병일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예산배분시스템과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전시사업을 남발하는 문제라든지 또 국가정책과의 일치성 여부 등을 점검해서 잘하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을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종합평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정부안으로 10억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행자부장관께서도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냉전으로 인해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경기도 면적의 40%, 인구는 260만, 그러나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이 경기도 평균의 60%에 못 미치고 군사 규제, 성장관리구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로 인해서 경기 북부는 여러 가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 시대를 맞이해서 경기 북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 되었습니다.

연천에서 수원까지는 3시간이나 걸립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시 한국 어디서나 두 시간 내 신행정수도에 접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인데도 서울을 사이에 두고 있기에 교통·문화 모든 부분이 비효율적이며 단절적입니다. 260만의 인구는 지금 당장 경기북도가 신설되어도 전남과 광주를 합한 인구만큼 상위권의 광역 자치체입니다.

사실 부실한 한탄강댐 건설비용이 1조 2000억이었는데 경기북도는 부지 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조 원이면 도청 및 관련 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북도는 경기 북부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덩어리 규제 해소와 경기북도에 관한 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 이북 경기도는 그동안에 분단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군사보호지역으로서의 규제를 많이 받아 왔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규제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경기북도를, 경기도를 분도해서 독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의회에서의 결정도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투표가 있어야 되겠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주민들의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연관성은 옛날도 그랬습니다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 쪽은 주로 공업지구로서 많이 발전해 갔고 북쪽은 여러 자연환경도 잘 보호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그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에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 읍내에 제일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조장, 철물점, 잡화점 그리고 수만 평의 농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월남한 그 부자에게는 4형제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근면함과 검소함을 배웠는지 모두 성실했습니다.

그 부자는 4형제에게 각각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영화에는 비교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자영업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실함만 물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출발선입니다.

이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분명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낡고 찌그러지고 새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의 비효율과 지자체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것이 경제 운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서 사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후의 경영평가를 철저히 하고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서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불건전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감액하는 등의 차별화 정책을 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되는 제반 규제는 다 털어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위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쌀 개방이 이제 농업개방의 마지막 물꼬가 트이는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 무너진 둑을 농민들은 온몸으로 막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쌀 협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허상만 지금 정부는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기본목표로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MMA 물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냐, 다음으로 유예기간 10년 확보하는 문제 또 소비자 시판과 민간 수입 허용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국내 수급관리, 유예기간, MMA의 증량 수준과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농민단체, 전문가, 농해수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구했습니다마는 내일이 17일인데 17일에 그동안의 과정을 협상에 크게 저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공개를 하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더 진행해 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쌀 수매는 사실상 마지막 정부 수매입니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쌀 가격 보전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무래도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도 수매가격을 4% 인하된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

는데 작년 기준으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4% 동결해야 600억 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금고에는 한탄강댐 불용예산 900억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이렇게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거대한 실버타운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출발점이며 이제는 도시인들의 안식처이며 생명창고인 농촌이 노령화된 농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촌 수매가와 노령화된 농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허상만 정부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쌀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개방에 대비해야 되고 국내외의 가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결 문제는, 국내의 수매는 WTO가 정해 주는 국내감축보조, 즉 AMS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동결하면 수매량은 줄여야 됩니다. 전체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수매량을 동결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줄여 가는 방향이 우리 양정제도에서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AMS 양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쌀소득농가 보전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양정제도를 개편할 방향입니다.

○이철우 의원 국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대립은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여 준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키호테와 아큐가 생각됩니다. 깜박 잠에서 깨어 비루먹은 망아지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없는 무지렁이 촌놈 아큐의 광대짓이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심각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73년 중학교 시절 우리 학교의 구호는 유신이었습니다. 선배를 보아도, 선생님을 만나도,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시장골목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외쳐 대는 유신 구호는 읍내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빈곤한 철학을 가진 우리는 격변하는 80년대와 권위주의 정권을 헤쳐 나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모색해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구질서에 대한 도전의 상징처럼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해체되면서 국가보안법은 자연히 그 권능을 잃어 가게 되었고 지금은 여야 모두 상징성만 남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7대 국회는 저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세대와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집행자였던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대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미래의 시대정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17대 국회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던 저와 국가보안법 집행자였던 누구든 TV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국민들 중 국가보안법 조문 단 한 줄도 안 읽어 본 사람이 허다합니다. 토론을 하여서 우리 서로는 얼마나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 중 절반씩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인정받고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싸웠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이란 상대가 해 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안법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일방적으로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발전의 주체와 민주화와 인권신장의 주체가 화해해야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이념의 찌꺼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바로 화해입니다. 남남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룰 때 비로소 북한을 민족화해의 장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자신감이 1만 불을 완성했다면 이제 화해를 위한 대각성 운동이 2만 불을 위한 제2의 도약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또 원외에서 야생마처럼 농민운동을 죽 하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염원과 많은 서민들의 요구를 가지고, 기대와 희망도 크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회가 너무 삭막하다, 사람에게 있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재차 느껴 보았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갈등 관계로 가는 것 같은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감정들을 가라앉히시고 좀 우리가 좋은 정책의 씨를 국회에 심어서 국민들이 좋은, 맛있는 과일이나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저는 농사꾼이다 보니까 봄이면 밭을 장만하고 토지를 장만해서 곡식을 심으려고 하다 보면, 괭이질도 하고 곡괭이질도 하면 땅이 깊은 데는 푹신푹신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비림땅이나 돌밭 같은 데는 조금만 치면 딸깍딸깍 하고 손이 아프고 괭이질을 몇 번 못 합니다.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곡괭이질하고 삽질, 괭이질해서 밭을 고르고 깊이 있게 하는 이런 자리인데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밭을 장만 못 할 것 같습니다. 밭흙이 약하면 조금만 가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넣어 놓아도 그냥 가뭄을 타서 말라 버리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흙이 파여 내려가서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 국회농사 정말 잘 지어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주제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반성하고 참회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고치고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농업의 70%는 농업통상에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식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통상 부분의 부처 책임자가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님 또 양당 교섭단체에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외통부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통부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장관은 못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관님이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입니다.

○강기갑 의원 차관님이 나오셨으면 했는데…… 차관님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통상 분야는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나왔습니다.

○강기갑 의원 우리나라 농업통상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몇 가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낮지만 산술적인 수치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농업이 주는 사회 공익적 기능,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강기갑 의원 여러 가지 다 합치면 한 50조 원에 달합니다. 수질 함양이라든가 홍수 방재라든가 공기 정화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하면 한 50조에 달합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통상 현장에 나가서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비록 수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측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대외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한중 마늘협상에 있어서 그 당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오래된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마늘에 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치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결과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서 문제가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세이프가드는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생산자의 권리인데 왜 그게 분쟁이 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그것은 중국이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런 무리한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생산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까지 정부가 이면합의해 가지고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이면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협상에서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것이 협상 자체는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대외적으로 적절히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수입 제한 조치는 권리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농민들의 권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이면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공개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공개 안 한 것만 문제가 있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규정과 국내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기갑 의원 조정관님, 지금 농민 생산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떤 국제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의를 지키는 하나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도였다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사실입니다.

○강기갑 의원 그게 사실이라면……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우리 부에서 낸 의견은 합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농림해양 상임위에 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농민들이 다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가 간의 신의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2002년 7월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민 여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외교부로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국제적 이면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을 하면 국제적 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통부가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력하겠다라는 신의에 불과하다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농민들에게 또 국회 상임위에 와서 이것은 도저히 번복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생산자들이 그것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헌재에 제소를 하니까 거기에는 의견이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신의적 약속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바꾸고 정 다르게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통부는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답하고…… 만약에 헌재에 내놓은 의견서가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에게도 기만적인 답변을 했고 농민들에게도 기만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헌재에 낸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7월에 황두연 본부장이 상임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당시 분위기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기갑 의원 그렇다면 정말 외통부는 큰일입니다. 그 당시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면합의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할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더니 벌써 시간이 반이나 가 버렸습니다.

(장내 웃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외통부를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다 학교급식법…… 자국의 농산물 조례 제정을 하는데 외통부가 계속 WTO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 의원 왜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사립학교가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광범위한 학교급식에 관해서 이것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WTO가 정하는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계속 내 왔습니다.

○강기갑 의원 세계에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약 20개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약 24개국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중에 미국과 EU, 일본 등 거의 22개 나라가 자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정부조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으로 학교급식이 WTO 규정의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오면 저희들은 위배된다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달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주 제한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강기갑 의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조달에 저촉을 안 받게 협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촉되도록 규정을 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는 정부 조달 규정에 맞게, 아주 제한되게 그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부는 그 나라가 WTO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런 제도를 해 왔기 때문에 소위 Grandfathering Clause (예외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미국, 일본, EU 등은 우리하고는 전혀 달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시·군 단위는 조달협정 이행계획서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통부에서 계속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나주시나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그동안 학교급식을 못하고 있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시·군 단위는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기갑 의원 외통부에서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예외가 적용되는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강기갑 의원 시·군 단위도 몇 차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통부가 시·군 단위도 안 된다고 의견을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무조정실에서 그렇지 않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군 단위를 허용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말씀드린 것

과 같이 이것이 정부조달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강기갑 의원 아니, 그동안에 WTO에서 의견을 몇 차례 냈는데 이것은 위배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조달협정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부의 공공행위로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 규정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급식프로그램 전체가 WTO 규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할 경우에는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외통부가 어느 나라 외통부입니까? 그렇게 물어오면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의견을 내놓아야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그렇게 분명히 의견을 냈습니다.

○강기갑 의원 의견을 냈는데 나주시 같은 데는 계속 제소된다 해 가지고 몇 개월째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의견을 냈고 나주시에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강기갑 의원 제가 지금 농림부장관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고 국무총리께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안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조정관님은 들어가십시오.

농림부장관님……

장관님, 쌀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부장관 허상만 지금 6차 협상까지 끝났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화 유예기간, TRQ 중량 문제, 또 민간 수입, 소비자 시판 이런 문제를 놓고 대개 언론에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많이 구했기 때문에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 그 정도 선까지 와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농민단체들이 협상 결과를 예측하면서 13일에 대규모 시위를 했고, 또 19일에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부장관 허상만 농업인들은 결국에 쌀농사에 따른 소득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미 정책 방향이 DDA 협상이 종료되는 앞으로 3년까지 계속 3년 단위로 해서 최소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지금 준비해서 이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시안을 놓고 농민단체, 전문가, 최종적으로는 국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 발표를 하셨는데도 계속 농민들이 지금 야단 아닙니까? 집회를 하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농림부장관 허상만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19일 행사에 대해서 대표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수렴해 가지고 소득 보전 방안에 충분히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농림부가 발표한 소득 보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단순하게 농민들 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 재협상, MMA 물량이나 시장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서 받아들이면 10년 관세 유예하더라도 쌀산업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고, 우리 국민의 건강 문제고, 생명의 담보 산업인데 이걸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절박감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화하느냐, 관세화 유예하느냐 국민들 앞에 밝혀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농림부장관 허상만 예, 최종적으로 진행 과정을 내일 17일 국민토론회에서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를 공개해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관세화의 내용이 전연, DDA 협상이 2005년도로 연기됐기 때문에 아무 구체화가 없습니다. 관세화가 불리하냐, 유리하냐 판단할 수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허상만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강기갑 의원 불확실한데 2개 내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이거 농민들한테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허상만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 쌀 협상은 DDA 협상과 별도로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기갑 의원 그것도 논란이 많지만, 관세화는 지금 완전히 백지수표를 써 주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걸 놓고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저걸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는 것은 기만행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도저히 불투명한 관세화 부분을……

○농림부장관 허상만 결국에 택일은 관세화 유예를 지금처럼 정부 입장대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과도해서 정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관세화로 갈 것이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강기갑 의원 아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불투명한,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뭘 어떻게 선택하라는 겁니까? 관세화는 2005년 12월 이후 가야 윤곽이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걸 재고해 주시고, 17만 원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장관 허상만 의원님께서 DDA 협상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율이랄지 TRQ랄지 민간 품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지금 예측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은 금년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고요.

쌀 소득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시안이기 때문에 시안을 놓고 더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강기갑 의원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제발 협상 내용 좀 밝히고 제대로 의견을 받아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그걸 거부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이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관세화 받을래?', 아무것도 모르는 관세화를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농림부장관 허상만 의원님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협상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주장을 전부 그대로 공개해 버리면 상대국과의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떠냐 하면 이게 양자협상이 아니라 다자협상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마지막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상대국 입장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민감한 부분, 최소한 부분만 공개를 안 했지 나머지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강기갑 의원 협상에 불리한 부분을 공개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농해수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는 공개하면서 국회의원한테는 공개를 안 한 게 한두 가지였습니까?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도저히 시간 때문에……

국무총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 문제 이전에 공무원노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강기갑 의원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는 법안, 또 이해찬 총리님,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등 지금 여권의 핵심 분들이 이 법안 발의한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미처 문서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아마 그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런데 왜 지금은…… 10년이 넘

었는데 당장 이거 합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파업권을 부여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입법안을 발의할 적에는 파업권까지 포함해서 발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파업권을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강기갑 의원 지금 정부안 보면 단체교섭권, 가입권, 여러 가지 협약의 무력화 등 법안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법안 성안하실 때 공무원노조와 대화나 토론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입권이라든가 교섭권에 관해서는 ILO 권고 기준에 전혀 미흡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쟁의, 파업하는 부분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부가 주무부서인데, 지금 노동부장관님이 나오셨나요?

(국무위원석을 돌아보며)

안 나오셨나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쪽하고 몇 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파업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강기갑 의원 계속 투표 행위도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지금도 계속 대화를 안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투표 행위는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다른 일반 노조의 사업장에서는 집단행위를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무슨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못 하도록 공무원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 하는 행위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전공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임은 아직은 노동조합법상의 조직이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법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 행위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강기갑 의원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그것을 폭력적으로 경찰을 투입해서 하면, 돌멩이 든다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매질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찰이 모르는 데서 몰래 한다면, 모르니까 단속을 못 한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어디서 한다'라고 공지하고 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단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강기갑 의원 아니, 경찰이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경찰이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런 투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마 싱갱이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기갑 의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이 악덕 기업에서 하는 블랙 리스트 같은 그런 문건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어디서 나온 지침인데요?

○강기갑 의원 이것이 행자위에서 나온 지침인데요.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이것을 보니까 전화도 추적을 다 하고, 친인척들까지 감시해서 하는 아주 반인권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나중에 저한테 한번 사본을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총리님! 아무튼 우리 사회는 경제가 중요하고 정말 위기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경제 이전에 화합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도 '경제, 경제' 하지만 지금 화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국화만사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성안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파업을 하려고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대화의 장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왜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고, 다만 공무원은…… 제가 교육부장관을 할 때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일은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님이신 김원기 의장님이 그 당시 노사정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제가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으면서 전교조 합법화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교사들도 파업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관공서의 기능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기능이 정지되면,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파업을 하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한테 주고 있는데 정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폐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법률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 직장 폐쇄권이 없을뿐더러 공무원들이 실제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무슨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총리님! 아무튼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에 나서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실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 버렸습니다.

농촌은 사실 어머니의 품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민은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쌀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쌀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청주 흥덕을 출신 노영민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단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헌법 질서 운운하는 그러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은 헌법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는 우리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헌법적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입법부가 양원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가 하원이고 헌법재판소가 상원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작년 12월 29일, 특별조치법을 정당 간에 어떠한 대치나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합헌 추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국회는 법 제정에 앞서 헌재의 자문을 미리 구하는 절차를 두든가 아니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합헌 유무를 묻고 난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번처럼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다 정지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엄청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헌법재판소는 87년에 제정된 성문헌법에 기초한 기구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아주 생소한 기구이고 제도입니다. 헌법재

판소의 표현대로라면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 없는 기구입니다. 즉 헌재는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성문헌법상의 근거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어도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4개 조항에 걸쳐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강제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때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했던 60%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강제력 있는 법 규범에서 일탈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축구경기로 치면 심판과 같습니다. 축구경기의 심판이 공정성을 잃고 선수처럼 경기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상대 선수의 백태클에 넘어진 것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퇴장시킨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심판이 축구경기 하나 망쳤다고 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경기도 산하의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서울대 이성우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신행정수도를 연기지역으로 옮겼을 때 발생할 생산 유발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보고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영민 의원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자체에 대해서도 지역 내 총생산이 8조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충청·영남·호남권에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258조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경기도는 오랫동안 숨겨 왔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입장과 다른 연구 결과가 당혹스러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대국민 설득력을 포함한 국정 홍보 기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여론은 호의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과거사 진상규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그 의미와 뜻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에 일부 악의적인 언론보도나 야당에 의해서 그 진의가 왜곡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반대 여론이 먼저 커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대국민 설득력을 높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정부의 정책 내용을 우선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에 대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제한된 홍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정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에게 정책 내용이 진면목하게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거나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곧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 등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행정수

도 건설 추진 당시에 계획되었던 위치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규모의 축소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원래 선정했던 연기·공주 그 지역은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비교·평가해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지표화해서 2등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평가를 받으면서 선정된, 행정수도로서 적지로 지금 평가받은 곳이고 그동안 그 평가에 대해서 별 이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부의 여러 기능을 옮겨갈 때 역시 그 평가 자체는 매우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속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부서가 갈지, 어느 규모로 갈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그 규모와 이런 것도 함께 결정하게 될 텐데 가능한 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의 분산이나 비효율성을 막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그리고 새로운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는 충청 지역의 민생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금융의 문제라든지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 또한 기존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망설임 등 지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너무나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충청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재 결정이 나면서 행정수도가 안착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상대로 안 됨으로써 생긴 심리적인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있고, 또 실제로 대토를 장만하거나 해서 옮겨가려고 금융 대출을 해 놓은 사람들의 물질적·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 인근 도시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려니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불투명해진 데서 오는 정책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큰 것은 충청도민들의 심리적인 허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후속 대책의 방향과 그것을 빨리 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기본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어제부터 드렸고요.

금융을 이미 대출해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지금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혹은 대전시를 통해서 사례를 좀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나 산업단지 하고의 연계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후속 대책이 확정되면 재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그리고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충청권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안 사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 선정 문제라든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사업, 오송·오창 지역의 신도시 개발사업, 대전 서남권 개발계획, 그리고 천안·아산 지역의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추진 의지가 있어야 이들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라든지 오송, 아산, 대전 서남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수도와 관계없이 원래 시행을 확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정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다만 그중에서 고속철도 분기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수도하고 연계되기도 합니다마는 자체 타당성을 갖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2005년도까지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사안들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행정수도가 지금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좌절됨으로써 행정 기능 중에서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과의 연계 문제는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대상 기관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 기능에 있어서 제한적인 행정 기능만의 도시로서는 애초에 정책목표로 삼았던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도시의 기능을 행정 기능과 타 기능을 복합시킨 복합도시로의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그 지역에 행정 기능이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는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서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자족 기능을 갖고 운영될 수 있어야지 인근 도시의 위성도시처럼 되면 도시 자체가 안정되지도 않고 또 행정의 비효율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족 기능을 가질 만한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역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연계된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규모에 따라서 자체로서 자족 기능을 가지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연관된 분야를 통해서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도 같이 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그 지역에 제일 적합한 기능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쪽으로 이전하는 행정 기능과 연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충청 지역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비해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과 거래 중지 등이 나타나고 있고, 금융 부실을 우려한 금융권의 대출 중지 또는 대출 회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민들의 생계형 대출이나 기업의 일상적인 자금 운용까지 여의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충청권지역에서 우려되고 있는 금융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헌재의 발표 이후에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공동 점검단을 만들어서 면밀하게 움직임을 검토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지역에서 그나마 민심이 안정된 것은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위원회가 어떠한 형식이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정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제정책의 좌파적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세나 소득세의 누진율,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국가재정 중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 등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니면 또 다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이것이 누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선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기준으로 봐서는 전혀 좌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누진율은 기왕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보유세 체제를 개편하면서 단순하게 고치고 누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는 오히려 정부는 꾸준히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대한 비중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있고, 우리는 아직은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서 적극적인 복지라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좌파 정권이라는 것은 당치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는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추구해 나가는 데 정책의 기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중도주의보다는 오히려 좀더 보수적인 데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최근 각 지자체마다 경마 등 사행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이 레저세를 지방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레저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세수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지역에서 자기네 재정 부담에 의해서 건설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좋다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했을 때는 그 운영 수익을 지자체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레저세 한 세목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합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서라도 레저세는 반드시 국세로 전환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반대가 만만치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관련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우려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청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그리고 고속철 역세권의 확대 개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각종 개발계획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장관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먼저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주신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청주공항의 활성화, 그다음에 오송역 등의 역세권 개발 등 지역 현안 사업은 저희들이 신행정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내년까지 목표로 해서 관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확정 과정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안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최근 서울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교통·환경·사회복지 및 주택 도시개발에 총 1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과밀화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용으로 전체 63%인 97조 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서울시 자체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자체 계획안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서울시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막대한 비용 지출을 놓고 볼 때도 저는 국토의 균형 발전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 중에 단계별로 진행하는 연차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단계별 개

발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고시를 하고 나머지 지역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고시될 것으로 이미 예정된 지역에 향후의 택지 우선분양권 같은 것을 노리고 이른바 '벌집'이라고 하는 철거를 전제로 한 대규모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악의적인 보상을 노리고 여러 가지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건축에 대한 사전적인 제한조치를 현재 관계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기간 동안에 과도적인 규제를 위해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이러한 보상을 노린 난개발 건축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는 1960년대 이래 모든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숙원과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화 촉진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현실에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분권화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저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만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사업은 지방과 충청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적인 발전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방화 전략과 세계화 전략의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 지방화 전략이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도권 재정비, 동북아 경제 중심, 기술 혁신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이 세계화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IMF 외환위기와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 수도권의 이상비대화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필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총량을 배가하는 일이야말로 제2의 국가 도약 성패를 가름할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의해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 의원의 경제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지금 전시도 아닌 이 한반도에서 유례없는 대탈출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해 버린 국민과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같은 탈출이지만 북한에 비해 우리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탈북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맨몸으로 빠져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다투어 이민을 나가는, 그리고 나가려

하는 삼사십대를 키우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논 팔고 집 팔아서 대학 공부를 시켰고 본인들은 입시지옥을 견뎌 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인재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되어 살고 있거나 살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서민들이 중동, 서독 등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 와 중산층에 편입되었고 그것이 당시 우리 서민들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IMF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에 있는 금붙이를 스스럼없이 들고 나와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당장은 어렵지만 힘을 합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구호처럼 되어 버린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 제 입으로 또 하기 싫지만 우리 경제, 중산층·서민층 할 것 없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장사가 되지 않아 분신 같은 솥단지를 깨부수며 절규하는 사람들, 카드빚 갚을 길이 없어 일가족 동반 자살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정부 여당이 그렇게 미워하는 특정 신문들과 한나라당이 꾸며 낸 조작극이란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도대체, 도대체 왜 이리 하고 계십니까? 정녕 이런 것을 원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든 어렵지 않다고 하든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비단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경제 자체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이제부터는 도저히 이 가난에서 헤어날 것 같지 않은 절망감입니다.

겨울은 깊어 가는데 전기, 수도, 가스가 끊긴 집은 늘어가고 노숙자 수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전기가 끊기더라도 한 달만 있으면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서민들은 절망하지 않고 견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태껏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었습니까?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어려워 온통 아우성들인데 민생경제 살리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시기에 민생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4대 법안을 지금 꼭 상정하여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케 해야 되겠습니까? 4대 법안 중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친북좌파 세력이 득세하여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구소련처럼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4대 법안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제는 닫힌 마음의 빗장을 좀 푸시고 우리 국민들, 너무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카드대란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연 이틀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드대란 원인 중에 가두 모집 규제를 하지 않은 잘못이 큰데 이와 관련해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1분과위원장이었던 안문석 증인은 "2001년 금감원에서 가두 모집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왜 가두 모집을 즉시 금지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길거리 카드 모집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다만 가두 모집 규제를 금감원 규정으로 넣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많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올리도록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한 안건을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자기 마음대로 길거리 모집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회의록을 만들면서 그 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규제 심사 결과 통보서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내면서 실제 회의 결과와 달리 카드 가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당시 정부가 이처럼 공문서까지 변조하면서 카드를 마구 모집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공문서 변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우선 질문의 핵심이 길거리 카드를 모집하라고 억지로 정부가 허용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카드 모집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뜻인지 그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문 취지로 봐서는 아마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카드 모집을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조치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절차를 어겨 가면서 그런 위규행위를 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해가 없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상, 그때 우리 국정감사 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회의자료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통보를 한 공문서가 다 있는데 이 안문석 증인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통보했는데 안문석 증인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그 정해진 절차를 어겨 가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따져서 나중에 오해 없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안문석 증인은 참고로 지금 현재 고려대학 부총장이시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국회에서 증언을,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봤듯이 감사원 감사는 카드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은 밝혀내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만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도록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내수와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그 구조적 요인도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적 적응의 어려움도 있고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수출 위주 제조업 육성을 위한 획일주의 체제가 그 한계에 부닥치면서 새롭게 바뀐 환경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방된 체제하에서 민간 주도의 시장 경쟁을 바탕으로 한 다원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이해와 주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학습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쉽게 투자처를 찾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전환의 적응과정과 학습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어 온 불확실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꾸어서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한 믹서기에 넣어서 돌린다고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하향평등주의 망령에서 벗어나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좀먹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증권 선물 통합거래소 이사장의 경우도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구태를 보이지 말고 선임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경쟁력 있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분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경제 총 책임자인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겨우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저의 형편상 도저히 전기·수도료를 낼 수 없어 전기 수도 모두가 끊겼습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애들 밥해 먹여서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부총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동절기를 맞이해서 전기·수도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하려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하루 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인 국민에게 그런 포괄적인 답변으로는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동절기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재학 시절 부모님이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하기 위해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300만 원을 막지 못해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딱지 때문에 취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창구에서 하나하나 상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접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창구에 찾아가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불량자 문제는 정부의 정책 혼선에 기인한 바 큽니다.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낙인을 없애는 문제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기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하겠다는데 그런 투자는 일종의 투기라 국가라고 투자에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노후연금은 제가 납부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자식이 낸 세금이나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위험한 투자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연금이 결정할 것입니다.

○김정훈 의원 그러면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0'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거의 '0'입니다.

○김정훈 의원 '거의 0'이라는 것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0'이 아닐 수 있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러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 '거의'가 확률상 발생이 되었을 때는 부총리님께서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모텔에 음식점과 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손님이 격감한 것은 물론 그나마 오던 외국 관광객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텔 지을 때 은행 돈 빌려서 지었는데 지금은 이자도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텔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경기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는데 침체된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이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지방 소재의 모텔이나 숙박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은행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다시 솥단지 깨는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좌추적권 남용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

법 계좌추적을 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려 275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서도 법률상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명의인에 대한 통보 의무를 단 1건도 이행하지 않아서 모두 형사고발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국가기관에서 계좌추적을 할 때 명의인에 대한 통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아니, 금융실명제법상 재경부장관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점검하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러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적한 것 금융기관 통보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러면 무엇을 관리하셨다는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부산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지금 선석상 처리 능력 200%를 처리하고 있어 체선·체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가 광양항의 물동량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여 광양항개발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경제적 논리로 타당성이 없는 광양항 개발을 억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간 항만은 반드시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개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그 투 포트 시스템(two-port system)은 이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국무조정실의 평가 위원은 아마 민간 위원 자기 나름의 판단을 말한 것뿐일 것입니다. 정부는 기왕에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서 차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반쪽에 서 있는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지 말고 온 국민들을 포용할 때 비로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를 감정적으로 비난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국가의 천년대계인 수도 이전 문제를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전략적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가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좌절되자 분노한 충청도민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헌법재판소와 야당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처음 의도한 대로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충청도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의 골이 패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발 이제부터는 국민들을 상대로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헌재 경제부총리께서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구조조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장경제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재 부총리님!

경제적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희망의 동아줄을 엮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일에는 저는 물론 저희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제에관한질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고유가와 내수 부진, 달러화의 약세 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관습헌법의 출현은 가뜩이나 힘든 민심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지난 시절 누적되어 온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오래된 체질을 바꾸는 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방한한 IMF 대표단은 한국 경제를 "조정기를 겪고 있으나 기초체력은 좋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견실한 수출 증가율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배경으로 공히 "한국 정부의 과단성 있는 정책과 경제 개혁"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사상 공세와 끊임없는 저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가의 수준에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은 반시장 정책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연기금투자제도는 태평양을 건너 여의도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야당 대표에 의해 '연기금 사회주의'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정치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미국 등 선진국의 연기금투자제도는 '연기금 공산주의'로 불리워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냉전은 해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신인도와 직결됩니다. 허구적 이념공세로 가득찬 냉전 마케팅은 정책도 노선도 아닙니다. 국가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자해행위일 뿐입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세계 1위의 디지털 코리아에서 과연 이러한 흑백 냉전 논리가 더 이상 상품성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색깔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습니다. 재활용 불가로 판정받은 철 지난 녹슨 폐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진정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살피고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무엇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를 이성의 눈으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전진해야 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로 경제 분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는 대형 자원개발회사 설립, 복수차관제를 포함한 조직강화 문제 등을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짓고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이나 에너지 자원 사업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조 7000억 정도가 에너지 사업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에특 세입은 평균 2조 60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이 중 약 6000억 정도는 타 부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평균 약 1조 70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에너지 사업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세나 특소세 등의 일정 부분을 에특 세입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발전용 석유수입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예상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에너지 절약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특소세나 교통세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수입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 또 전기요금 중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다양한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예.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간에는 어떤 이유,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도 무력충돌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훼손할 수 없

는 원칙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기술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해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높여 가야 합니다.

북한 지역에는 남한 지역보다 그 가치상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수준은 미비합니다. 최근 북한은 해외동포 기업가들에게 광산 개발권 부여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이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 광물 개발 문제를 남북경협의 공식의제로 설정하고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김 의원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식을 깊이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경제장관회의를 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남북 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수록 남북표준의 불일치는 큰 장애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북표준을 통일하는 데만 최소 90조에서 최대 360조 정도가 들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의 폭과 수준을 높이고 통일비용의 점진적 분산을 위해서 남북표준선언과 남북기술교류선언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산업기술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기라든가 철도라든가 최근에 우리하고 관련된 것에서 보듯이 남북 간에 표준이 일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표준을 통일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다음은 차세대 성장산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세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력 양성, 시장 조성,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히는 "각국의 부는 각국이 어느 정도의 고급인력을 양성해 내는가의 경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확대하고 차세대 관련 대학원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차세대 산업 분야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장학금 신설, 병역특례 확대 등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인력, 기술, 그다음에 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2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적자원R&D개발기획단을 지난달 9월에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과학기술부하고 함께 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10만 명 정도의 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더 정확한 수요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필요한 수요를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에 맞추어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그냥 강의 수준에서만 배우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대학교육의 한계였는데 산학 협동체제를 지금은 권장하는 수준으로 해 왔는데 보다 제도화시켜서 아예 산학이 긴밀히, 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야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서 석사 박사 혹은 박사 후 과정까지 안정되게 연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한 후에 학비를 상환할 수 있는 이른바 장기 대여장학금제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안정된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병역특례 확대 부분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된 시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경기대책을 차세대 산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비쿼터스 도시같이 차세대 IT기술을 신도시 건설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고가형과 중저가형으로 동시에 개발해서 고급주택과 국민주택 등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계획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관 구매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용·실습용 로봇을 제작해서 전국의 초등학교에 보급한다면 로봇 산업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장비나 시설 등을 활용해서 산업기술 체험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또는 첨단기술 최신 상품 등을 시연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테마파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력 아이템을 선정하고 차세대 산업과 연관된 시장 조성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분야는 민간 부분에서 바로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어느 정도 궤도가 닦이면 그다음 민간 부분이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제도, 규제 완화,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기초적으로 해 주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그리고 신기술은 누가 먼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황우석 교수의 표현대로 과학기술은 잠깐 낮잠 자는 시간에도 추월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분야에 대한 재정계획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10조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를 개발할 당시에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약 2000억 정도의 재원을 조성하고 적극 육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술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세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차세대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기술하고 인력입니다. IT산업이 요즘에는 일반화되었습니다만, 처음에 IT산업을 개발할 때 우리가 오늘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모험적인 기술개발에 들어가고, 모험적으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또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인력 양성은 최소한도 5~10년 정도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서 선행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현재의 우리 재정으로는 그런 정도까지 내다보고 하는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국채 발행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이런 부분은 또 낭비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재원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사용이나 배분 구조를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마 경륜 로또 카지노 등에서 조성되는 재원들 중에 약 3% 정도만 산업기술 재원으로 전환해도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조성됩니다. 이 재원을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한다면 세계적인 상용기술을 경쟁국들보다 빠르게 성공시켜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로봇경기장이나 카레이스경기장 등을 만들어서 신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여가 활동의 공간도 제공하고, 동시에 기술발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각종 재원의 역량을 점검하고 재편해서 또 필요하다면 신설해서 차세대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재원을 어디에서 조성할 거냐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륜, 카지노, 복권 이런 것들은 이미 산업개발, R&D 개발하는 이런 데 일부는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 진흥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

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적자원 개발, 기술 개발 이 필요성을 우리가 서로 인식을 공유하면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식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재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태년 의원 잘 알겠습니다.

표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합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소니 사의 베타맥스(β-max)는 기술적으로는 매우 우수했으나 VHS에 밀려서 세계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렸습니다.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수천, 수조를 들여 개발한 기술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99년 표준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국가표준정책을 전담하는 강력한 통합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실효성을 갖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관계된 정부 부처에서 좀더 진지하게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중소기업 종합대책이 좀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1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배정으로 대폭 할당하고 배정기준도 낮춘다면 중소기업 인력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중소기업에 착실하게 오랫동안 잘 근무한 사람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건설 물량의 10%를 먼저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범위를 더 넓혀 나가고 또 오래 일한 사람에게 가점을 더 많이 주어서 임대주택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파트 투기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임금을 웬만큼 올려 줘도 이런 주거비용으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어렵고 사용주들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많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극심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임금의 절반 가까이가 이 주거비용으로 흡수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임대주택이 더 우선 배당될 수 있도록 역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좌파라고 공격하는 이른바 386 의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중국 경제의 발전을 이른바 386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김영삼 총재께서 40대 기수론을 내걸었을 때 많은 분들이 구상유취라고 비웃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존경하는 김용갑 의원께서 “산자위 386이 좌파가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좌파 논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비전을 갖고 정책 경쟁을 합시다.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과 뉴욕의 공항에서 우리말 안내 방송이 나오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없어서 못 파는 세계 일류 브랜드가 됩니다. 서울을 출발한 고속철은 북녘 땅을

지나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남과 북이 어울려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의 축전을 엽니다.

우리 국민의 우수함과 자신감, 용기와 애국심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반드시 부강하고 바른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낼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더욱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제에관한질문이 끝났습니다.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정치에관한질문(계속)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선거구 국회의원 김종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17대 국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기득권 논리에 휘둘려 피눈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절규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지금 충청권 하늘에는 행정수도의 꿈을 기대했던 무지개 대신 허탈과 분노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썩 같은 믿음으로 신행정수도의 푸른 꿈을 가꾸어 가던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영호남, 동서의 틈바구니에서 이런저런 푸대접도 감내했습니다. 핫바지니 멍청도니 해도 그럭저럭 받아넘기며 유순하게 살아오던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극심한 정신적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무지막지한 힘에 또다시 충청도가 내동댕이쳐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단순히 서울시민의 승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작약했던 서울시장, 도대체 어느 나라 시장입니까?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법치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호와 찬사를 보냈던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 눈에는 충청권 주민들의 심한 상실감과 허탈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같은 동포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것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재정비 사업은 장기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서로 연계되어서 패키지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존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철학이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 발전 구조가 무너졌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더 넓게 보아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행정수도 건설의 핵심 목표였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헌재 결정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총리실 산하에 후속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과밀 해소, 또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 전략, 지방분권, 이런 것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었던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금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과업은 국토 균형 개발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유에 의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사멸을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을 헌법 제130조의 개정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국민투표를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헌재 결정문에 보면 72조의 국민투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은 가능한데 그러나 그 뒤 문장에 보면 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명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만 가지고서는 가능치가 않습니다. 개헌을 해야 가능합니다.

○김종률 의원 그렇다면 2006년 내지 2007년쯤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또 부통령제 도입, 여러 차례 개헌 논의의 시기는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 이전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가 지금 2004년인데 어차피 2007년 대통령 선거 즈음에 가서는 아마 국회든, 어디든지 간에 개헌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개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신행정수도 건설이 그 기초가 되는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한나라당은 이번 4·15총선 때까지만 해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그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나라당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10월 21일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특별법이 폐기되는 것을 환호하며 박수쳤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전까지도 김덕룡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계없이 수도 이전을 반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있은 직후 180도 태도가 돌변해서 환영과 찬사를 보냈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김종률 의원 한나라당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뜻과 배치되면 불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여당도 수용하라느니 하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환호하고 축제를 벌이기에 앞서 그 기만적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속죄부터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추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당 대표의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일입니까?

박근혜 대표는 위헌결정에 대한 이의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느니, 체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위헌결정 그 자체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마당에 새삼스럽게 수용하고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 정부 여당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정했습니까?

한나라당의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는 공세는 정치적인 악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반대만을 일삼았습니다. 단 한 번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리더십을 인정하거나 존중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선고 전이라면 몰라도 선고 이후의 다양한 법리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사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말 나온 김에 쓴 소리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박 대표의 연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정책 부재, 대안 부재 속에서는 정말 한나라당의 미래가 없겠구나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화려한 수사 이외에 도대체 무슨 알맹이 있는 내용,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박 대표는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양극화 구조에서 법인세 인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재정 건전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감세정책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십시오.

입에 발린 달콤한 수사 대신 정책을 연구하십시오. 허구한 날 친북 좌파정권이니, 386 주사파니, 낡아빠진 매카시즘적 수법, 이제는 버리십시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저부터 먼저 전선에 나설 것입니다. 386 그들의 애국심, 그들의 충정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음침한 이념논쟁의 동굴 속에서 하루빨리 미래가 있는 광명의 평원으로 오십시오.

(「대정부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넘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 규정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총리! 질문합니다.

(일부 웃음)

총리,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련한 부분이 관습헌법 사항이라고 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수도 이전한 국가들 중 헌법을 바꿔서 수도 이전을 한 경우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들어와서 수도를 이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문헌법에 수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수도이전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도에 대한 헌법 규정 여부는 나라마다 각기 다양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90개 국가가 헌법에 수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160개 국가는 헌법에 수도라는 규정을 아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관한 것은 나라마다 역사성과 특수성이 각기 달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률 의원 이렇게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 입법부의 고유 권능을 무시하면서까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명확한 헌법규정을 새로이 만들어 낸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예 간판을 헌법제작소로 바꿔 달아야 한다는 시중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적 관행에 의해서 언제든지 성문헌법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성문헌법전보다 불문적인 헌법의 관행례가 우선하고 국가생활을 압도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헌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직접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일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김종률 의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소가 관습헌법의 이름으로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의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그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탄핵,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조 선배인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봐 온 저로서도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아니라 더 격하고 독한 소리를 쏟아 내고 싶은 절절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철저히 힘있는 보수·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헌결정을 내린 근거가 단순히 관습법이 아니라 보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觀心法)이라느니, 법복귀족 수구보수 재판관 7인이 주도한 갑신헌변(甲申憲變)이라는 세간의 속평을 마냥 쉽게 비아냥으로만 흘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무력화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독일 바이마르헌법과 바이마르공화국이 붕괴될 때 극우 전체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관습헌법 이론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이론적 도구로 루돌프 스멘트의 통합이론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대정부질문 뒤편에 논문을 첨부했습니다.

특히 3~6페이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론

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21세기 이 한반도에 극우세력의 음울한 망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정녕 수구·부패 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가 정말 두렵기조차 합니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서 좀더 겸허하고 성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회생과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그 반동으로 수구·부패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지난 10월 13일 유럽 출장을 가기 전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약 열흘 전쯤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담당 변호사 말씀은 관습헌법 이론을 가지고 성문헌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습헌법 이론으로 이것을 위헌결정을 내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적이 당황을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라든가 정부로서 법안을 한참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1년 가까이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권력구조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김종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은 헌법학계뿐만 아니라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소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간과 각계 간에 그 법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국민과 각계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부에서조차 이런 이론적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심지어 법조인들과 헌법 전공 학자들조차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법조인과 헌법학자들이 법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번 위헌결정의 논리를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논리가 관습헌법 이론이고 그만큼 논리 박약하고 무리한 논리 비약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법 논리에 대해서는 국민 간에, 학자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찬반 양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장관님도 법조인이시니까, 아마 역사적으로나 또는 우리 법 생활 측면에서 볼 때 판례 축적된 양만 놓고 볼 때도 헌재의 판례보다는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더 많은 판례가 민사판례로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민사 판례조차 관습법 이론이 인정된 예는 불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장관님도 몇 개인지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관습법은 되도록이면 적게 인정해야 된다, 좁게 인정해야 된다, 또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적게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마지막 보충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보충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률 의원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헌법 제130조를 적용해서 위헌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희들은 그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사자 적격, 소위 적법요건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다, 또 그리고 청구인이 관습헌법을 주장했지만 관습헌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종률 의원 제가 그 방대한 의견서를 보니까……

의견서가 전부 대충 몇 쪽이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상당히……

○김종률 의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낸 의견서에서 관습헌법 언급된 부분이 불과 손으로 한두 장 달랑달랑 들 수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장관님도 적법성 요건으로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건 이후에 한 50명의 판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 자기 집에서 자기는 무식한 사람 됐다, 적법성 요건을 과연 어떻게 통과할지 당연히 의문이 들고 그래서 다 부적법 각하되는 것이 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고로 위헌결정을 하려면 이 쟁점에 대한 충분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변론에서도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으로 마땅합니다. 그랬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구두변론은 없었습니다. 서면심리에 의해서 이번에 심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구두변론…… 통상의 경우에는 이것이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판단이고 중요한 기초 법률에 대한 판단이니까 당연히, 오히려 일반적으로라면 그러한 구두변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서면심리가 원칙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종전 관례로 보면 중요한 사건은 구두변론이 있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관습헌법 이론에 의해서 위헌결정을 좌우할 것에 대한 집중적인 공방이 이루어졌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리가……

○김종률 의원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김종률 의원 현재 우리가 서울이 수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인식의 문제이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규범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어떻게 관습헌법이라는 최고의 당위규범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인지, 법 논리상의 무리한 비약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기각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명제가 아니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규범력을 가진 규범명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관습헌법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종률 의원 성문헌법이 최고 법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명시적 의사가 특정한 헌법제정절차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고 우리의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을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제가 알기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보충적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견해에 입각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던 것입니다.

○김종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총선 국민들께서는 과거보다는 희망을 선택했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입니다. 깨끗한 정치입니다. 국민 통합의 편안한 정치입니다.

소모적인 이념 공세,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당당히 대안으로 승부합시다. 미래를 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와 타협, 상생의 무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야만 역사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저의 연설 내용 중 일부 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충정과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

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감 때 확인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7월 29일 장관 취임사에서, 그리고 8월 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든지 형사안보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보법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이런 안보형사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하고, 지난 8월 25일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도 "우리나라 국가 현실이 형법 조문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자리를 메워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10월 22일 법무부 국감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그동안의 발언에 대하여 소신이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취임사에서 그런 말은 한 일이 없고 그 이후의 말은 맞습니다.

○주성영 의원 현재 국가보안법 운용실무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처벌하는 대표적 사례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반국가단체는 그동안에 북한 노동당, 조총련, 그런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적단체는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그다음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이런 정도 기억이 납니다.

○주성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여당의 형법 개정안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여당 형법 개정안의 요지는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내란죄에다가 폭동을 전제로 한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주성영 의원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한총련이나 주사파에 대한 현재 수사 중이고 또는 재판 중이거나 복역 중인 사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폭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국가단체 이런 것이 제출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폭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견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한을 폭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견해가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해서는 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김승규 그것은 하나의 가정적 사실인데, 구체적 사실 관계가……

○주성영 의원 형법 제1조와 형소법 제326조에 나타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승규 형법 제1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형법 제1조에는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주성영 의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될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주성영 의원 또 2항은 그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즉 구성요건이 상당히 결여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결국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면소판결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

○주성영 의원 돌아가십시오.

다음,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통일부장관께서는 지난 10월 5일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강연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상관없으며 보안법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과거 냉전 시기에 국가보안법은 일부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권 탄압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데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탈냉전과 함께 또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진행되면서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셨습니다만 현재 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은 6명 그리고 구속수감 중인 사람은 5명,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 사

회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지 안보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것입니다.

○주성영 의원 지난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주성영 의원 그런데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10월 12일 현재 총 인권 관련 진정 접수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진정이 40여 건으로 전체 진정의 0.36%에 불과하고 그나마 폐지 요구는 단 두 건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주성영 의원 그리고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인권문제가 뭐냐라고 물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응답한 국민은 1300명 중 1명뿐인데 그 사실도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주성영 의원 이해찬 총리께서 지명자 시절에 이부영 당의장 취임 오찬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반대하며 개정 논의나 대체 입법안에 찬성한다" 이런 말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주성영 의원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 지난 2002년 2월 25일 모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의견을 묻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얘기한 그 답변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개정의견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16대 국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야당은 보안법의 'ㅂ'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완강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7대 들어서서 국회 환경이 바뀌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수용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16대 국회 상황과 17대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국민적 합의가, 국민적 동의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정표 방식으로 일단 개정을 통해서 폐지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미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주성영 의원 그때 장관 얘기를 그대로 읽어 볼게요. "이적단체 고무·찬양은 이미 사문화되었고 그다음 단계로 긴장완화가 제도화되면서 확실하게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었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머지 조항들도 차차 남북 화해·평화가 정착되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맞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습니다.

○주성영 의원 지금 긴장완화가 제도화되고 북한 위협이 제거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평화가 정착되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당국 간 대화가 일상화, 제도화, 물론 지금은 당분간 정체 또는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과거 냉전시대에 비교해 보면 괄목할 만한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1950년 6·25 때 주 남침로였던 지역에 가로 10㎞ 세로 10㎞, 100㎢에 달하는 지역을 남측에 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DMZ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긴장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좋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서 6·15선언에 합의하고 김정일의 답방을 받아냈습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까지 보안법은 있는 것이지요.

○주성영 의원 국가보안법 체제와 한미동맹 체제에서 북한을,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당국 간의 대화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장관의 얘기대로라면 현재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보다 더 여건이 나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과거의 점진적 폐지론자가 오늘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개정론자가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북 관계는 가다가 설 수도 있고 섰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성영 의원 그러면 아까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6명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란죄, 바로 여당 개정안입니다. 내란죄나 외환죄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없습니다. 그러면 내란죄, 외환죄도 폐지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

○주성영 의원 과거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 바로 전형적인 내란죄가 악용된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해찬 총리도 서울대생으로 거기에 연루되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유관순 열사가 구속된 죄명이 뭔지 압니까? 바로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토참절 조항입니다. 지금 여당 안이…… 부화수행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내란죄 법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

○주성영 의원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여당의 개정안에 보면 예비음모로 처벌하고 교사범 공범으로 처벌하고, 확대·유추해석으로 처벌하고, 판례를 주장해서 처벌하고, 다시 옛날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운 것 하나 물어볼게요. 허성관 장관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통령 탄핵 기각이 있었습니다. 기각 결정 전에는 여당의 어느 누구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탄핵 기각 결정이 나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논평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합니다."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주성영 의원 당시 정동영 의장은 "헌재 결정은 참다운 민의를 확인해 준 것으로 참으로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정동영 의장이 어떻게 말씀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주성영 의원 천정배 원내대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헌법질서가 수호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헌재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맞습니까?

이해찬 총리께서 총리 100일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따르면 된다."

장관님 아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그것을 꼭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성영 의원 장관님, 총리 좀 잘 모시세요. 가서 총리님께 그런 말 했는지 물어보세요.

정동영 장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2002년 2월 5일 바로 그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쎄요.

○주성영 의원 제가 그 전문을 프린트해 왔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력이 장악하는 언론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이면서 언론이 아닌 언론, 그때의 참담함을 너무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권력은 언론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신념입니다"

지금도 그 신념에 변함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습니다.

○주성영 의원 장관께서는 유신시절인 1978년 12월에 문화방송에 입사하셨더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주성영 의원 80년 광주항쟁 당시 광주문화방송의 경우에는 소위 계엄분소 발표문 보도 문제로 시위대에 의해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옥이 전소되었습니까?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주성영 의원 그 당시 보도를 보니까 그해 여름에 전국에서 저항언론인 711명이 거리로 내쫓기고, 63개 언론매체 가운데 44개 회사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정동영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시

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장관께서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신상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좋습니다.

장관께서나 대통령께서도 유신시절에 판사와 언론인을 지내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는 돈 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났던 겁니다. 이 점을 확인해 둡니다.

총리께서 언론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선, 동아는 역사의 반역이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장관의 언론관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무슨 답변을 듣고자 원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직접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조선, 동아일보가 국민의 대표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정책질의를 주십시오.

○주성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통일부장관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철책선이 뚫리고 김선일 씨가 피살되고 잠수함이 돌아다니고 그런 업무나 챙기세요. 쓸데없이 다니면서 자신 없는 데 대해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내려가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레드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병적 증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핑크 콤플렉스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핑크 콤플렉스란 첫째로 실상 좌파가 아니면서 좌파처럼 보여야, 즉 북한을 이해하고 주체사상 몇 마디를 지껄여야 우리 사회의 곳곳, 방송·언론계든 학계든 시민단체든 정치권이든 진보주의자이고 인권론자이고 평화주의자이고 실력이 있어 보인다는 착각을 가진 부류와, 둘째로 실제 좌파사상을 신봉하면서도 겉으로는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류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이고, 송두율 씨는 후자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좌파라고 지칭하면 억울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며칠 전 노 대통령의 LA 발언도 이 핑크 콤플렉스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소위 4대 악법에도 핑크 콤플렉스의 병적 증상이 깊고 넓게 깔려 있습니다. 핑크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소모적 이념 논쟁에 강하다는 사실과 그것이 없으면 별로 먹고살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력의 뒷받침도 없이 즉흥적 인기 위주의 반미 자주를 외친 결과 외국 자본 투자, 미군 재배치 등에서 엄청난 국민 부담만 돌아왔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부 때 88올림픽을 유치하여 노태우 정부가 개최하고, 노태우 정부가 대전과학엑스포를 유치하여 김영삼 정부가 개최하고, 김영삼 정부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유치하여 김대중 정부가 모두 개최하여 국력의 상징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세계무역박람회 유치에 진력했으나 중국 상하이에 빼앗기고, 노무현 정부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근대화·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먹고살아 왔습니다. 노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포항제철 삼성전자 IT 반도체 컴퓨터 조선 석유화학…… 어떻습니까? 숟가락만 들고 다니기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생명산업과 문화산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국회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범위와 CT, 국제영재학교 설립 방안에 대해 논쟁할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행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서 평양을 다녀오시고 6·15선언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현 남북 교착상태의 책임을 국보법에 전가하고 남북정상회담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총련과 주사파 세력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통령과 여당이 그렇게 환호작약했던 바로 그 탄핵기각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는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

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정 파괴적인 공격을 일삼는 일부 인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서양 속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Barking dogs seldom bite.

자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의원 여러분, 상대를 자극하거나……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발언이 됐으면 합니다.

---

o 의사진행의건

(15시58분)

○부의장 김덕규 질문이 계속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대표의원의 확인을 거친 그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나누어 준 인쇄물에는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시대가 있긴 있었는데,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작소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야당의 대표에 대하여는 제대로 대안을 내고, 수사 대신 정책을 연구하라, 수구 소리도 모자라 꼴통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관습헌법은 처음 보는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헌재를 무시하고 국민을 자극했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정부 여당은 겉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존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할 뿐 아니라 헌재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 헌재 권한의 무력화 시도,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본말을 전도하여 짜깁기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며 집권한 후 성문헌법을 없애고 자신의 구미에 맞게 새롭게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도의 소재지 문제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기 위하여 불문헌법 이론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헌법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법질서가 파괴되거나 대체되었습니까? 집권당이 여전히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그런데 나치 독일이나 파시즘 이태리에서는 기존 헌법에 갈음하는 새로운 헌법이 집권자의 구미에 맞게 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예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선동정치와 상징조작을 하늘 높이 부르짖었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던 히틀러의 선전상인 괴벨스가 오늘의 시대에 환생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극단적인 총리의 야당 무시, 헌법 무시, 국민 무시의 망언으로 국회가 공전된 후 정상화된 것이 불과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의장이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야 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을 삼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대표를 수구 꼴통이라고 부른다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 대하여 촉구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무엇이 모자라서 뒷전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야당 지도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음해를 계속하십니까? 3년 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괴벨스 식의 선전 선동 포퓰리즘적 정치는 국민을 오도하여 국가를 파멸로 이르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역사를 조작하고 야당 지도자를 음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잘살게 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

다.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저는 13일 대정부질문의 과정의 파행이 원인이 어디 있던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을 떠나서 또 한 번 반성하지 않는, 계속 반성하고 있지 않는 그리고 오늘 내내, 오후 내내 반성하지 않을, 앞으로도 어쩌면 계속 반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뭘 반성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최경환 의원 의석에서 - 뭘 반성하라는 말이야!)

(「니나 반성해라!」 하는 의원 있음)

(「니가 뭐야 니가!」 하는 의원 있음)

최경환 의원!

정두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포트 정권'이라고. 아시죠?

정형근 의원이 '사회혁명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한선교 의원이 총리를 불러 세웠다가 들어가라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전여옥 의원님이 이해찬 총리를 전 총리라고 부르고……

(「김영선 의원님이죠」 하는 의원 있음)

아아아 예예예예…… 죄송합니다.

전여옥 의원이 대통령은 외국에 오래 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아시잖아요? 오지 말라고도 했고.

노회찬 의원께서 신상발언 과정에서 국민들이 쳐들어 올 것이다, 의원들의 밥줄을 끊으러 올 것이다 할 때 박수치셨잖아요. 한나라당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김종률 의원님의 발언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열린우리당은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님께서 오늘 대정부질문서를 보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방금 조금 전 의사발언했던 대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발언하지 않는 것이 원활한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발언을 그대로 싹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종률 의원께서는 헌법 전문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분 양보하더라도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아마 헌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사례가 충분히 헌법을 공부하신 분들에 의해서 연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히틀러 나치즘이나 무솔리니 파시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주변 의원들의 권고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그 발언을 함으로 인하여 대정부질문 내지는 국회가 파행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면서도 파행을 시켜서 4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저지하자는 의도가 담기지 않은 이상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주성영 의원께서는 현재 신분이 검사이신가요? 의원이신가요? 국회의원님이시면 총리에게 질문하실 것은 총리에게 해 주시고…… 제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요. 일부 검사님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하세요.

주성영 의원께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건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좋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저는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지금 저는 의사 진행…… 의장께 발언하건대요, 요청컨대 이대로는 국무위원들에게 창피해서라도 의원으로서 계속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경고해 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고,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국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2. 정치에관한질문(계속)

(16시09분)

○부의장 김덕규 감사합니다.

두 분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의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러한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열린우리당의 김낙순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며칠간, 또 방금 전에 봐 왔던 본회의장 풍경에 대해서 잠시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장관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무총리 무시하고, 장관 세워 놓고 망신 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질문해 주시고 민족을 위해서 정치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계 선진 선두그룹을 이루는 OECD 국가 중 1만 불 시대를 넘어 2만 불 시대에 진입한 국가는 19개 국가에 이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성장이 정체되어서 이류국가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95년 1만 불 시대에 진입한 이래 9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을 달성한 OECD 선진국들이 1만 불 시대에 겪었던 정체와 혼란을 우리 한국이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가들의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성공 요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의 틀을 알맞은 시기에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 국가와 실패 국가로 나누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1만 불 시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기존의 낡은 틀을 개혁하여 2만 불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신산업이 떠오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벗어날 국가적 먹이사슬 개발은 물론이고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개혁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밤을 새우고 휴일을 반납하면서 만든 법안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당이 계속적으로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야당과 실질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약 1360건 중 4대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당의 결정을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다수 여론을 거론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논평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7%만 찬성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7%가 그 법에 찬성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 이상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그게 국회와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미국·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다" "국보법은 친북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정부에 국보법 존속을 건의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세일즈를 해야 할 야당의 대표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도록 압력을 넣어 달라고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에게 한 이 말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한국은 외국 기업이 사업 하기 좋은 투명한 국제적 국가로 바뀌었다"고 발언한 윌리엄 오블린 주한 상공회의소 회장의 확신에 찬 답변이 우리에게 신선한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대표께서 묻지 않은 것까지 얘기했다는 상공회의소 회장의 불편했던 당시 상황 설명에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한나라당의 초조함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중앙일보 순회 특파원은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을 향해 '국내에 없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니 가급적 오래오래 머물다 오시라'고 공개적으로 야유

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흔치 않다. 정상이 아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표현의 자유에 실어 날린 언어의 비수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향해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나라야 어찌되든, 정상외교가 망하든 실패를 하든 대통령과 여당의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생 정치' 운운 한다는 것은 웃을 일인 것입니다. 국익이라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야당 대표와 한나라당은 각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제출한 4대 개혁 입법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다시 '헌재' 운운 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모두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버리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한나라당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발목 잡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폄하하는 '3무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살리기 3대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국민 홍보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다수당 한나라당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통과된 법률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질책 여론이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정부에서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이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들에게 행정수도의 필요성과 내용을 더 쉽게, 더 친절하게 잘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위헌결정이 그로 인해서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국정홍보처를 더 강화해서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낙순 의원 지금 충청도 일대가 상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아까 질문을 하신 충청도 출신 의원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라서 위기에 처한 현지 주민, 또 금융권,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농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균형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분권을 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시키는 큰 전략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제일 큰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원래의 정책 목표는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지금 마련하겠습니다. 그 대책이 연말쯤 마련이 되면 충청도 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해 가면서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금융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서 재경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감위라든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금 당장 금융 지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매매에 큰 타격을 보고,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더 큰 사태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 의원 예, 충격에 휩싸인 충청도 도민들을 위해서 빠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이 그간 정부가 밝혀 온 북핵 해결의 기조와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북핵 해결과 관련해서 3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세 번째 한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 불용,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국의 역할, 이 세 가지를 WAC(국제문제협의회)에서의 연설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북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동안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한미 간에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연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순 의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연설이 북한에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에만 주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여 향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 '북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조속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본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겁니다.

또 북·미 간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간에는 북핵 불용,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에 이르는 접근법에 있어서는, 접근 방법론과 그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이가 있는 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가느냐, 아니면 우리 생각은 생각대로 분명하게 밝혀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지난 1년 9개월 동안 용산기지 이전, 또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이라크 파병 이런 중차대한 4대 안보 현안, 이 네 가지 문제에 관해서 한미 간에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 이슈들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긴밀한 생산적 해법 조율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합의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핵문제 해결도 한미 간 정상의 역점 프로젝트로 삼아서 충분히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확신을 그 연설의 바탕에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순 의원 장관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심지어 일부 야당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 우리의 의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갖는 것을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통일부에서 정책평가위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전 AMCHAM(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제프리 존스 씨가 참여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미국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아는 미국인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을 너무 따라가지 말라. 한국은 한국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오히려 북핵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하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로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정통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북한이 미국보다는 한국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미국인이면서 이런 얘기를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되새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순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연설이 지난 2년간 북핵문제 논의 과정이나, 그리고 미국 대선 등으로 해서 그동안 협상 환경이 달라졌고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일부 언론에서 다시금 전체 연설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뒤를 다 자르면 논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맞는지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원문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처지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핵 개발 의도가 무엇이든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러한 기본 전제를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낙순 의원 남북 관계 법령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법적 기초하에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이제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실효성 부여를 통한 남북 관계의 안전성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되고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의 조기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보안법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입법의 취지가 다르고, 또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안법의 개폐 문제와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은 별개 사안이라고 이해합니다.

국회에서 이 기본법을 제정해 주시면 남북 관계, 대북 화해·협력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적 기초를 가지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낙순 의원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의해서 철도·도로의 남측 구간 공사에 3990억 원이 소요되었고, 개성공단 기반시설 1095억 원, 대북 식량차관 1620억 원 등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정부출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민간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타 기금 수익금을 출연하는 방법 등 이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그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기금 내지는 통일 이후의 통일기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남북 관계 진전을 이루어 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서 기금 소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핵문제가 해결 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경제협력이 이제 2단계로 발전해 가려면 보다 많은, 큰 자금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면서 해마다 정부 출연금을 늘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민간 출연의 확대라든지, 김낙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기금 수익금을 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국회와도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임기 내에 지방분권을 법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신과 과감한 지방 이양은 지방발전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날 행정제도 개편이 뒤따르면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16개 광역단체와 234개의 기초자치단체

의 지방분권이 완료된 이후에는 행정조직 개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는 생활권, 교통권, 지역 정서, 유통물류 여건에 따라 2, 3개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80~90개의 기초 행정 단위로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6개 광역단체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분권 기능이 가능하도록 확대·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광역시·도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 또 전국을 현재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84~90개의 기초단체로 개편하자 하는 이런 안, 또 몇 가지 안이 더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은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 행정구역들이 모두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가지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정치권의 합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등 여러 가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순 의원 지방분권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꼭 이루어 내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국가 주요 과제의 하나인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50대 민생 개혁 입법들은 시급히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선진 한국의 도약을 준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사회는 한층 투명해지고 활력이 있으면서 국민적 화해와 대통합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김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울의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 저는 노숙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낮에는 용산역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300여 명이 줄지어 밥을 받고 아무렇게나 서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멀겋지만 짠 된장국, 어묵, 콩나물, 깍두기, 밥, 70년대 초반의 훈련소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좋은 편이었습니다. 멀건 국에 밥만 말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씩 먹곤 합니다. 이렇게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이 서울에만도 5000명이나 됩니다.

그날 밤에 저는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약 1000여 명이 무료급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국과 밥뿐이었습니다. 일부는 식사 후에 무료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중에서 460여 명이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에서 밤잠을 잤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730명이 거리에서 밤잠을 잡니다. 2002년 460명, 작년 560명에서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노숙인 숫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환란 때를 오히려 능가합니다.

쉼터 수용자를 포함한 전국의 노숙인은 4300여 명이나 됩니다. IMF 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야 사우나, 심야 다방, PC방, 만화방에서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 '잠재 노숙인'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출된 노숙인의 몇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뿐입니다.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이들도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노숙인이 왜 늘어납니까? 빈곤층이 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사는 빈곤층이 국민의 10.4%입니다. 작년의 9.8%에서 0.6% 포인트 늘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얼굴의 상처를 집에서 바느질실로 직접 꿰맸다는 50대 가장의 기막힌 사연이 신문에 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빈부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보면 확연합니다.

과표 5억 원 이상이 3081명으로 전년보다 22.7% 늘었습니다. 과표 1000만 원 이하도 10% 늘어 119만 5334명이 됐습니다.

지니계수도 작년에 0.312로 증가했습니다. IMF 때인 98년의 0.28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빈곤층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현실을 고치지 못한 개혁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저는 참여정부가 좌파 정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말싸움이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분배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혹시 개혁 자체보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룻밤에 7000원 하는 쪽방에서라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행인들로부터 가려진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바람입니다. 이것도 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총리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IMF 이후에 노숙인들이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던 추세였었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수가 부진하고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쉼터가 있어도 시설에 입소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심에서 노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해서 쉼터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MF 이후에 우리가 개방경쟁 체제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체제의 원리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 또 그 위에 약 7%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점들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이제까지 나온 노숙인 대책은 노숙인 보호 대책입니다. 노숙인 감소 대책이 없습니다.

총리께 다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노숙인 숫자가 이대로 좋다고 보십니까? 노숙인이 더 늘어도 좋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노숙인 감소 정책은 왜 강구하지 않습니까? 빈곤층과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슨 정책을 쓰고 계십니까? 분배정책이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공연히 소리만 요란한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실제로 노숙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를 통해서, 고용을 통해서 소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 산업구조가 이른바 '일자리 없는 성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자꾸 여러 분야가 성역화되고 기계화되고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자활 지원 대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좀 늘고는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전체적인 실업률은 금년 들어 더 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이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이 있으면 내놔 봐라' 하고 물으니까 "지난해 10·29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입니다" 이렇게 이정우 위원장은 답변했습니다. 집값을 잡았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이사가 크게 줄었고 이삿짐센터가 실업 상태에 빠졌으며 미장이들이 굶게 됐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어

렵게 만든 것입니다. 집값 잡다가 서민 잡은 겁니다. 이런 현실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10·29 대책으로 1년 동안 집값은 안정됐습니다. 대략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보다도 오히려 인상되지 않을 정도로 집값도 안정되었고 전셋값도 안정되었는데 대신 부동산 경기, 주택시장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연관된 앞뒤의 산업들이 많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부산 등 6개 지방 도시의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완화하도록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켜 가면서 보다 더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은 예정대로 꾸준히 더 공급하는 그런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완만하게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래도 우리는 교육이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해 줄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육마저 계층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교육마저 계층 고착화에 기여하는 것 이대로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식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와도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이 총리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다는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보도된 것처럼 좋은 학교 입학률이 전국에서 대전 지역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지역이고 학력이 제일 높으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지 모르지만 소득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요.

그래서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반적인 경향은 역시 소득과 학력이 높은 사람의 자녀들이 비교적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뒷받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고착된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분이나 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사회학에서는 모빌리티(Mobility)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사회의 이동 유연성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는 다시 서울역에 나가 봤습니다. 농민 1만 5000명이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을 막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종묘공원에서는 600명의 빈민이 전국빈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농민과 빈민이 서울광장의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 빈민과 연대한 것입니다.

농민들도 이미 빈민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비율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 비율이 93년에는 95.5%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76.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도 허구가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함께 보아야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농가 가구당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93년에는 40.3%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99%로 올랐습니다. 농가가 100을 벌어도 99가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농가는 100을 벌어서 하나를 가지고 먹고살면서 자식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농민들의 부채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시설 투자를 했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일부가 도시 빈민화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노숙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 농민은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 터에 쌀시장 개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농민을 위해서 개혁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참상을 개선하지 못하는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농민의 빈민화를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농민의 빈민화를 막기 위해 무슨 정책을 쓰고 계십니

까? 119조 투융자가 실제로 농촌을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쌀시장 재협상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셨는데 농민의 빈민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농민의 소득 수준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현재 빈민화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이 노령화사회로 급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 특히 노령 농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119조 투융자가 농촌을 살린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9조의 투융자계획 자체는 굉장히 재정 규모가 큰 정책입니다. 다만 전달체계에 왜곡이 오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농촌에 대해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119조의 투융자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시장 재협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무역 규모가 아마 4750억 불쯤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이 2500억 불, 수입이 2250억 불 정도 해서 4750억 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무역의존도가 이렇게 큰 나라에서 쌀 협상에 너무 우리 입장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직접 지불해서 보전하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 비단 소득만이 아니고 정주 기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하수 보존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농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농촌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협상은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신만의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매듭짓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서 농가소득의 비율은 10년 만에 95.5%에서 76.2%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총리께서는 농가의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아닙니다. 도시 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농촌의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낙연 의원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연 49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12만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일요일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연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은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도노조도 총파업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그 다음 날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파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11월 2일에는 식당 주인 3만 명이 모여서 솥단지를 던졌습니다. 양계업자들이 닭을 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은 흔합니다.

시위 방식이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해서 가장 소중한 생계 수단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업은 솥단지를 던지고 싶어질 만큼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190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실업자 950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식점의 85%가 적자를 보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말합니다.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제 고향의 읍내 꽃가게는 일주일에 손님 1명을 맞는다고 말합니다. 꽃가게가 일주일에 꽃을 한 번 팔면 나머지 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위를 벌이는 사람에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 택시기사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 교육자, 사학재단 관계자, 사회 원로, 재향군인, 음식점 주인, 집창촌 여성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선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주민들이 날마다 수도 이전 요구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대한민국은 마치 시위의 종합전시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장관은 데모할 국민이 1000만 명쯤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민란 직전 상태라고 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경제가 위축돼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또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저는 전자를 '생계형 시위', 후자를 '갈등형 시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시위는 언필칭 개혁이 외면한 결과입니다. 갈등형 시위는 어설픈 개혁이 파생한 부산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국정과 관련됩니다. 이런 시위 양상이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 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런 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히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런 여러 분야에서 시위가 나오고 있고 안타까운 주장들을, 오죽 안타까우면 그렇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시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면할 수가 없는데, 다만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위가 많아지는 생계형 시위는 역시 내수 경제의 부진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단순히 경제지표만 파악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상황을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대략 20%~30% 정도의 내수…… 소비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10%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20%~30%가 줄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30~50% 정도의 체감을 느끼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구조 속에서 내수가 원체 위축된 데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양극화된 구조가 금방 해소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옛날처럼 IMF 외환위기 이후에 수습하듯이 10조나 20조 이렇게 풀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불과 2, 3년 후에 또 더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인내력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런 생계형 시위는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형 시위는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중에서 이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인데 공무원노조를 안 만들어…… 불용하겠다는 것, 허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되 파업권만 제한하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파업기금을 100억을 모으고, 파업기금을 모은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계가 어려운데 파업기금을 100억을 모으면 공무원들은 굉장한, 지방에서는 최고의 봉급생활자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공무원이 그렇지 않지만 지방 도시에 가면 공무원보다 봉급을 더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이 신분 보장되고, 정년 보장되고, 연금 가지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장을 받는 분들이 100억의 파업기금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엄정하게 의법 조치를 하고 있어서 오늘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상 복귀했고, 몇백 명밖에 결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진정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한 100여 명의 수배자들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마치 옛날에 무슨 큰 이념적인 운동을 하듯이 대응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총리 말씀대로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계형 시위를 줄이려면 역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갈등형 시위를 줄이려면 갈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예방, 완화, 조정,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정부는 갈등의 한쪽 당사자이기를 사양하지 않는 것 같습니

다. 그런 경우를 예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자살이 사상 최다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35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IMF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 자살자 35명 중에서 10명은 노인입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로 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많은 국민을 자살로 내모는 겁니까? 빈곤, 좌절, 무력감, 혼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원인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혁도 그 무엇도 자살의 원인을 줄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인의 일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정부 여당을 향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의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증진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을 관념 지향형에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구현이 개혁의 목표여야 옳습니다. 노숙인, 도시빈민, 농민 등 빈곤층을 줄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따뜻한 개혁, 인간의 얼굴을 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새로 만들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기본에 속합니다. 외교 안보를 국민이 걱정하게 하는 것은 개혁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둘째, 개혁의 방식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목표를 낮추더라도 다수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과도 협의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기량이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힘을 잃습니다. 국정 목표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분열의 리더십을 접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상처를 남기면 임기 중의 성취도 빛을 잃게 됩니다.

셋째, 개혁의 진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구시형 개혁, 통합에 의한 개혁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청와대비서실을 개편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비서실의 분야별 책임자들을 새 국면에 적합한 사람들로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은 참모들은 국정 경험도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최고 국정을 기획하거나 판정하는 체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제안과 관련해서 총리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과거의 관행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의 대사면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특히 생계형 범죄자는 대담하게 사면 복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과거의 관행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치인이나 경제인 중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들 나오셨고 일부가 계신 것이고, 생계형 경제사범들이 있고 또 요즘 같으면 민생사범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사회에 나와서 복귀해서 적응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가 있어서 정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구속된 분들은 대개 정치자금하고 연관된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새로운 정치…… 지금 제가 보기에 정치 풍토는 굉장히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져서 좋아졌는데 이것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 같은 것이 좀더 확실하게 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야 간에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의원 내년이 한일 우정의 해입니다. 한일 수교 4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체육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축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은 명성황후 시해 110주년,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해방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자칫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일제에 징용 또는 징병되었으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제, 어디쯤에서 돌아가셨는지 알더라도 유골을 모셔오지 못한 국민도 많

습니다. 부모의 추도의식 한번 갖지 못한 국민도 꽤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한을 정부가 풀어 주어야 합니다. 해방 60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는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무성의를 탓합니다. 일본의 무성의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본 탓만 할 겁니까? 일본의 성의는 촉구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도리는 다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60주년,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실태 및 진상 파악에 대해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셨고 이제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면 부모가 일제 징용 혹은 징병되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외교부로 하여금 그 실태도 파악하고 조기 봉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월말에 동경에서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 준비차 엊그저께 관계 부처 관계관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관계 부처 사람들의 이 문제에 임하는 자세가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최소한의 성공이라도 거두려면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충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얼굴들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같은 충정에서 몇 가지 제안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 의원신상발언

(17시06분)

○부의장 박희태 시간이 남았는데……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신상발언을 두 분 신청했기 때문에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議員 한나라당 경기도 일산을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어제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 우윤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윤근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문 끝에 제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보통신부랑 관련된 ICU(한국정보통신대학)에 대해서 물은 것은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라든지 정부 차원의 토론도 없이 제2 국립대학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조직 지휘 차원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각 부 장관 입장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부차관에게 발언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묻고 싶은 말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물은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기회를 주고 서로 생각을 흡수하고 교정해 가는 자세로 얘기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라는 자리가 정부 관료가 와서 얘기를 하고 싶은 대로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와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15분 동안에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0분은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끝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첨단 부서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원칙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 사

실은 경제 전문가를 기금에 좀 파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은 대통령이 밑에서부터 다 검토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국립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충남·충북 대학이 재정이 없어서 합친다는 마당이고 인구 출산율이 1.14 또는 1.19%밖에 안 되어서 5, 6년 후가 되면 대학교가 반 정도 이상 남아돌아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많은데 연구 자금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부터 대학교를 키워서 이것 되겠느냐, 지금 나라가 교육기관을 키우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돈 돌리기 방법으로 해서 400억에 가까운 수도약품을 꿀꺽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대학이라는 데에 돈을 1000억 가까이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시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교육시장도 그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부나 산자부나 정통부나 다 똑같다는 얘기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3개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넘어가면서도 그것을 잘 했다고 항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60억, 6억 또 몇천억에 가까운 한솔닷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하라고 경찰과 달리 검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것은 주제에 벗어나는 문제라고 해서 제가 자제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또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은데 다른 의원이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그 의원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 입장에서 했는데—그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 의원에 대해서 촌평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국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원 품평회라든지 아니면 의원에 대한…… 의원은 15분 내에 몇 가지 질문하고 행정 관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대로 다 하는, 어떤 의원을 공격하는, 국회를 공격하는 그런 경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 의원 간에 대화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백지위임으로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행정부와 교감을 하고 의논을 하는 데가 아니라 행정부가 평소에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도 여기 와서도 결국에는 의원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을 봉쇄하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저런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여야의 공방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신상발언입니다.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의원 열린우리당 소속의 전남 구례·광양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 한때 같은 법조계의 동료로서 서초동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믿고 있는 미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헐리우드에서, 액터스 스튜디오 연기학교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을 배우고 익혀서 그중의 하나만 얘기하고 나머지 아홉은 참고 인내해라.”

어지간하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삼가는 게 정말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 믿고 있는 소신입니다.

오늘 짧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정부질문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동료 김영선 의원의 질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 의혹이 있나 보다’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대학에 1041억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직 여당 의원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 답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

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차관에게 “그 질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내용을 중언부언하지 않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명백하게 알려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저는 평소 소신대로 의사진행발언을 삼가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 정치에관한질문(계속)

(17시14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하자는 절절한 각오로 등원한 지가 약 5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처음으로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는 벅찬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얼마만큼 희망과 만족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7대 첫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과연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선으로서 선배·동료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듣고 받은 느낌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용어는 ‘희망이 없다, 파탄, 추락, 어렵다, 힘들다, 무책임, 무능력, 절망’ 등 온갖 부정적이고 암울한 단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곧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 같고 얼마 안 가 파산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나려는 소비심리가 싹 사라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 수출이 약 2400억 불로 예상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약 250억 불로 예상되며 외환보유고는 1700억 불이 넘습니다. 경제성장률도 5%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긍정적이며 자랑스러우며 희망적인 것도 얘기하면서 내수진작의 방책도 내놓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나 기능을 옹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모독하고 조롱하고 인신공격성 질문을 일삼아도 괜찮은지 국민을 대신하여 묻고 싶습니다.

17대 국회가 변화에 대한 용기,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 난국을 해결하는 지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이끌어 내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이러한 공약의 취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도에 건설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반대하였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대선 당시에는, 선거운동 때는 반대했습니다.

○양승조 의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17대 총선을 몇 달 앞둔 2003년 12월 29일 당시 137석의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87%의 득표로 통과되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167표로 통과되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은 불과 4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승조 의원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박근혜 대표가 충청도 유세에서 신행정수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확약을 했다는데 총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총선 전에는 이미 합의해서, 당 간에는 합의해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물론 찬성을 했고, 총선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으로 유세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발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이것이 재론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선 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근거해서 후보지 지정 등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가시화하기 시작하였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 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앞장선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급기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이 없었더라면 토지수용 등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현 단계에서는 토지세목 조사를 하기 직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저희는 합헌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헌재 결정 전에는 저희가 세목조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면 바로 토지세목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승조 의원 본 의원이 한나라당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마음이 드는 것은 위헌결정이 나기 전날인 지난 10월 20일에는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이전 반대 운동을 강행하겠다" "합헌결정이 나더라도 수도 이전 반대 계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다음 날인 10월 22일에는 입장을 돌변해서 '법치주의의 위대한 승리', '헌재 위헌 결정을 환영하는 김덕룡·박근혜 대표' 등의 내용과 위헌결정에 대하여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환호작약하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자료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총리께서는 이런 보도와 사진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보았습니다.

○양승조 의원 본 적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양승조 의원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시켰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충청도에서 틀림없이 실현하겠다고 한 총선공약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환호작약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도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카메라 의식, 표정관리 부탁, 일희일비 조심(충청도민)' 이러한 내용의 쪽지를 돌렸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김덕룡 원내대표가 쪽지를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 사진은 지금 제가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양승조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양승조 의원 본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정말 앞뒤가 모순되고 부끄러운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조 의원 또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고, 위헌결정에 대하여 환호작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충청도민을 포함한 국민으로부터 신랄하고 통렬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역시 그것도 충청도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승조 의원 2003년 12월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면 정부

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으로 발생한 충청도민의 엄청난 손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입법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법률이 통과되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충청도 분들이 투자도 하고 이사도 하고 해서 생긴 피해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률적으로는 해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국 원래 행정수도 이전의 취지를 잘 살려서 그분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일을 수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국가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대안을 가능한 연말까지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이유로 관습헌법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법조인의 한 사람이지만 과문한 탓인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라는 것을 인식한 적도,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1000여 페이지가 넘는 각 헌법 교과서와 헌재결정집 어디에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라는 내용을 아시는지, 아니면 들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지금 지방자치특례법에 보면 서울에 관해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서울시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법이 있었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 그 두 법에 의해서 수도로서의 지위를 법으로 보호받고, 서울이 보호받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법안을, 행정수도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법을 개정해서 서울은 특별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수도는 이제 연기·공주 쪽으로 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습헌법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문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하위법인, 그 하위법에 의해서 성문헌법으로 수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승조 의원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양승조 의원 성문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명확하지도 않은 관습헌법을 이유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 말씀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입장은 총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구인데 그 기구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성문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중요 법률을 입안할 때마다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이 관습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나라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적이 전혀 없는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스리고 있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소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로서는 앞으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또 어떤 법이 위헌결정이 나서 이런 당혹스러운 사태가 생길지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의원 충청도민들은 신행정수도를 충청

도에 건설해 달라고 청원한 적도, 요구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 충청도 국민들은 “이것은 대충청도민 사기극이다”, “충청도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이다”라고 하면서 극도의 충격과 분노, 허탈감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도민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단기·장기 대책이 무엇인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요일에 후속대책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후속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그 기구가 비로소 발족이 되면 공식적으로 후속대책을 준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충청권을 비롯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다음 주에는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제가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는 행정수도만이 아니고 이와 연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가 지방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들을 다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수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재점검돼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행정수도와 연관된 지방분권화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 발전과 관계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일반 시민,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연말까지는 기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본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투표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헌재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국민투표로 해서 관습헌법을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헌법의 근거가 마련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충분히 다 읽어 보면 결국 헌법을 개정을 해서, 개헌을 해서 헌법에 명문화시켜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는 어렵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상황에서, 앞에서 양 의원님이 죽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이 선거 전에는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17대에 들어와서는 당 차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는 일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거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수습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충청도민들을 위해서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해결책이라고 보고 후자의 길을 정부는 지금 택했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께 금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500만 충청도민의 충격 당황 허탈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총리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난 1948년에 제정되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인 1948년에는 현행 우리 형법이 없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형법이 미처 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양승조 의원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면 폐지될 운명의 법률이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인 권승렬 장관의 법안 설명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면서 비상 시기의 임시조치법 성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 후 1953년 휴전협정 직전에 우리 형법이 제정되었고 당시 형법에는 휴전되기 전이라 내란죄, 외환죄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이 1948년에 처음에 제정이 될 때 정부가 낸 발의안은 내란행위특별처벌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란행위특별처벌법…… 그것이 나중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법명이 바뀌어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 1953년도에 형법을 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기법안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양승조 의원 형법을 제정한 후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이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며 형법의 제정과 관련된 국회 발언에서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이제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은가”라고 언명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국회 속기록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국가보안법은 이후 자유당 독재 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존속하여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권유린이 가능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헌법상의 주요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지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국가안보 위해사범은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형법을 개정해서 내용을 보완하면 실제로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다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여러 법학자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우리와 현실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평화통일의 상대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을 당연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서 반영해 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번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바는 없었습니다. 내란음모죄로는 제가 두 번 기소되어 가지고 징역을 4년 가까이 살았는데 국가보안법은 한 번도 기소는 안 되었는데 국가보안법에 관한 조사는 제가 네 번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가서 받은 조사 내용은 국가보안법 저촉 사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 데모하거나 시위하거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남산이라고 그랬지요, 정보부 안기부 이런 데 가서, 국가보안법이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가서 수사받을 일이 없습니다.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받지……

그런데 거기 가서 네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보면 역시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조사하는 데 이 법을 말하자면 악용하는 경험들을 저 자신도 많이 봤고, 아마 여기도 그렇게 악용되어서 고문까지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형법에 반영해서 개정을 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최소한도 전혀 악용의 소지 없는 새로운 대체입법까지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자는 2004년 10월 21일 현재 5명에 불과하고 2004년 1월에서 9월까지 75명이 적발돼 28명이 구속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국가안보는 국가보안법만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 체제에 대한 우월성에 의하여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을 간단히 비교하면 총 GNP는 약 6000억 불 대 184억 불, 1인당 GNP는 1만 2000불 대 818불 정도로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은 5년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나 경제 어느 면에서 보아도 체제 경쟁은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대하여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국가안보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정상회담할 때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정책의장으로 참여해서 북한의 고위층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그분들이 남쪽에 오면 그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한 열 번 이상을 그분들하고 죽 얘기

를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렇게 체제경쟁을 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 주고 있는 쌀이 옛날에는 누가 보내 줬는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에게 다시 재포장해서 나눠 줬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폴리에스테르로 된 튼튼한 쌀포대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빨간 글씨를 써서 40㎏짜리, 20㎏짜리를 보내 주면 주민들에게 그것을 바로 나눠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지원해 준 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지금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경쟁 차원의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보안법 문제는 폐기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의원 국가보안법에 있어 최고 전문가들인 한국형사법학회 등 소속 교수 14명은 형법교수 230명을 대표하여 2004년 9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성명서에서 최고 전문가인 형사법 전공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을 폐하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교수가 몇 분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30명의 형법 교수들을 대표해서, 열네 분이지만 그분들을 대표해서 서명을 받아서 성명을 냈으면 아마 형법 교수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법에 임하는 태도, 자세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 법리나 법체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승조 의원 국가안보를 튼튼히 그리고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이 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얼마 전에 의원님들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구축함 3대를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무려 1대당 돈이 10억 달러 이상 들어가는 굉장한 구축함 3대를 해 가지고 바다에 배치를 하는데 그 위력은 제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좋은 그런 구축함 3대를 우리가 곧 갖습니다.

그럴 정도의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결재를 하면서도 속으로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것은 비단 대북 관계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을 핵을 포기하면서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민족이 공존·교류하고 통일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인내력을 가지고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를 철저하게 하여 국민이 조그마한 불안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중 지역 간의 갈등은 정당에 대한 선호도와 각종 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지역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을 타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16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역문제를,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그 부분만은 전혀 반영이 되지가 않은 셈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있었고 권역별 비례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만 제외하고는 전국에 골고루 의석이 분포돼 있는 편인데 한나라당은 한 지역에 편중도가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선거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50년 만에 1인당 GNP가 67불에서 1만 2000불로, 1964년에 1억 불 수출이 2004년에는 2400억 불이 될 정도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에는 총 GNP가

6000억 불이 넘는 세계 제11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우리 한민족이 경제회복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현재의 경제난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개혁도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목표로 귀착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청신한 기풍으로 선두에 서서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김충환 의원입니다.

먼저 행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현실을 보다 깊이 고려하겠다. 사려 깊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여 대통령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정당의 협조를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사청문회에서 들으신 기억이 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부분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총리께서 취임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20%대로 최하에 이르고 있고 국가경쟁력은 지난해에 비해서 11등 떨어진 29등, 국가의 브랜드 가치는 2등이 더 떨어져서 12위 그리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경쟁국인 싱가포르, 중국, 대만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또 경기는 KDI가 3/4분기 경기전망을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급전직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당의 4대 악법 밀어붙이기로 상생의 정치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지연, 남북대화 중단, 휴전선 철책 절단, 대미외교의 악화로 국방이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사갈등, 강력범죄의 증가, 고구려사 왜곡, 교육정책 혼선 등 국정 전 분야에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국정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지난 5개월 총리 취임 후에 제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선 국정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먼저 어느 때보다도 정책결정 속도가 참 빨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처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총리께서 아주 잘 조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지금 정책결정 속도가 빠르면 좋은 방향으로 빠르면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볼 때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빨리 결정했다 이런 것은 별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렇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김충환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는 베를린에서 술을 먹고 기자들에게 '한나라당 나쁜 것 세상이 다 안다. 집권하면 역사를 퇴보시킨다. 조선·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다, 까불지 마라 내 손아귀에 논다.' 이런 말들을 해서 언론사와 한나라당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미 심각하게 국제기준의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청을 해 왔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정의채 신부님은 이러한 총리의 행태에 대해서—죄송합니다마는—"인간성이 결여되고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 능력, 인품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총리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회 인사청문회의 신뢰에 큰 흠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만약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5개월 된 이 시점에 일어날 줄 알았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것은 일반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만약 이런 문제, 지금과 같이 IPU, 국제적인 이런 비난을 받고 또 여러 중요한 지도적 인사들이 이렇게 심각한 평가를 하고 국정에 이와 같이 혼란된 일이 일어난다면…… 또 이번 국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어디에서 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장관이나 총리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장관께서는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 "상당히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의 베를린 발언, 한나라당에 대해서 죽 얘기한 것, 동아·조선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 점은 이렇고, 이 점은 이렇고, 이 점은 이래서 좋다, 좋지 않다'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총리를 모시는 장관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김충환 의원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은 국회의원 전부 앞에서, 또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의원님께서 방금 그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충환 의원 다음은 수도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18일에 총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해서 다음날 수도 예정지를 발표하신다고 하기에 저희가 "한 열흘만, 조금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우리 당에서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한번 토론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했더니, 총리께서는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열우당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가장 큰 주요 정책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 사안이 그날 우리가 총리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국회에서 의논해서 했더라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와 같이 실패하게 된 책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우선 총리께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한 그 부분은 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정부에서는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다 알 수가 있고 일정 부분 각자가 책임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점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하고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충환 의원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괜찮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책임을 논하는 것이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런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당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지.

저는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충환 의원 다음에 좌익정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와 관련 "현 정부를 좌익 정권으로 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불법행위·음해행위에 대해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당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익, 보수, 수구꼴통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더 좋은 정당이 되도록 원내 정당, 사이버 정당, 정책 정당을 추구하면서 개혁적 선진 보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국민 앞에 솔직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숨기거나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보십시오. 얼마나 선명하게 자기의 주장을 잘 펴고……

(장내 웃음)

그래서 지난번 신문들이 국회의원의 정책성향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의 상당수 분들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레프트적이고, 이렇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나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우익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다르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무슨 뜻인지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우익이라고 하면 열린우리당은 우익이 아니고 다른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위원이 특정 정당이 좌익이고 특정 정당은 우익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좌익 우익 할 때는 대부분 국민들이 별 저항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제 느낌이 그렇습니다—좌익 우익 하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거부감을, 우익은 우익대로 좌익은 좌익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나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좌익 우익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익’ 이렇게 써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충환 의원 (웃으면서) 장관님의 오늘 말씀, 황희 정승 같은 말씀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장관님을 평소에도 존경합니다마는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문에 보면 레프트 라이트 하는 것은 대개 가치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문제는 객관적으로 다른 언론이나 제3자, 국내외 사람들이 뭐라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명백하게 이 여당을 좌익·친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포용주의자인 미국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의 아시아연구소 소장이 “한국은 사회 내부의 분열과 한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을 개혁적·진보적·좌익적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채 신부님은 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현 정권의 핵심세력은 사회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수구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시민 의원 의석에서 - 국무위원 빼고 우리끼리 하자고요, 그만하고! 너무하네 정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좀 앉아 계셔 보세요.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중간에……

국내 경제 전문가 100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문화일보에 뭐라고 났느냐 하면, 현 정부의 정책이 반기업·반시장·좌편향 정부다 이렇게 한 분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은 이미 객관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민감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진보계열 인사에 대한 복권을 추진하고 간첩 출신 민주화 유공자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간첩 출신 의문사위 활동을 인정하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북한에 비판적인 조·중·동—요즘은 뭐 조·동—을 통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자신의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확실하게, 우리는 레프트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레프트가 좋다,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레프트이면서 아니라고 자꾸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남들이 다 말하는 것을 국내에 있는 우리만 입을 닫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까?

(「김 의원님! 레프트 라이트 들어봐. 2개 다 있잖아」 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의원님께서 좌익이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

(「김 의원 자신이 레프트 라이트 다 갖고 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이야기나 스타인버그 박사 이야기나 정의채 신부님 이야기나 여론조사 결과나 이것이 다 객관화된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장관 하기 전에 연구를 하는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을 한 것이지 이것은 일반화될 수 없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각각 여러 가지 좌파하고 가깝다고 말씀을 죽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좌파 우파 할 때는 제가 참 소박한 생각으로 주로 경제정책 면에서 이것이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참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좌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경제정책 중에서 이것이 좌파적 정책이다 그러면 제가 또 제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 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환 의원 공산당 합법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우리가 공산당 합법화한 적 없습니다.

○김충환 의원 대통령께서 합법화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임기 중에 합법화하겠다고……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에서 아마 "공산당도 합법화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전한 나라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모든 사상을 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그 나라의 혼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간다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 정도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충환 의원 글쎄, 하여튼 그 밖에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김병연의 할아버지가 김익순인데 이 분이 선천부사였다가 홍경래의 난 때 항복을 해 가지고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김병연이 자기 할아버지를 지칭해서 "백 번 죽여도 아깝지 않은 만고의 비겁자"다, 이렇게 시를 써서 장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공직과 가족을 포기하고 평생 불우한 방랑시인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지난 16대 때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이 아직 채 발효도 되기 전에 새 법을 아주 강력히 여러 분들이 여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행자위에 와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걸 추진하던 지도자들, 의원들 중에 친족이 일본 헌병 오장, 만주 괴뢰국 경찰특무, 만주 보통학교 훈도, 금융조합 간부 등 민족을 수탈하는 기관에서 일했던 흔적이, 행적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김삿갓을 우리가 볼 때 이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친일 했던 사람이 3대가 떵떵거린다"고 노 대통령께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앞장서 나서는 것은 친일·용공 인사들, 애국선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주군 괴뢰 장군 딸도 생각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굳이 김삿갓처럼 하지는 않더라도 국민 앞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이 친일진상 및 과거사규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략적으로 부관참시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정부질문 하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만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이왕 할 바에는 진상을 철저히 한번 밝혀 봅시다.

다만 다음 정권이 다시 현 정권을 부관참시하는 일이 없도록 중립적인 비권력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현재 과거사 관련 모

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거나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돼서 일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런 위원회들이 구체적으로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고 의문시된다 하는 적극적인 비판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절차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법은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는 문제이고 또 두 교섭단체에서 모두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 주시면 이 법은 또 타 부처에 속하지 않은 일이라서 불가피하게 어렵지만 저희 행정자치부가 맡아야 됩니다. 정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엊그저께 노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수단으로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충환 의원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한미간에 상당히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6자회담의 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을 6자회담의 틀에 인도해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충정이 그 연설에 들어 있다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의원 신문에 보면 토니 블레어는 부시의 푸들, 고이즈미는 부시의 굿맨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미국과 다른 동맹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한 대로 김정일의 대변자라는 평을 혹시 다시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깨지게 됩니다. 우리로서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고 이것을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긴밀한 협의·조율을 통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역점 프로젝트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추진하기로 이미 전화를 통해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충환 의원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남북대화에 의한 북핵 개발 저지라는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고, 또 둘째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전제가 무너지고, 셋째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 오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6자회담의 틀은 북한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자회담을 조속히 가동시켜서 외교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1차 북핵 위기 때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습니다. 워싱턴과 평양을 오고가는 대화를 귀동냥을 통해서 얻어듣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핵문제 발생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국은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해 왔고 그리고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가 그래도 평화적으로 관리돼 온 데에는 참여정부의 최선의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의원 한미 관계와 기존의 평화 추진 노력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베이징에서 잡힌 62명이 송환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송환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 측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탈북자에 대해서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처리 원칙에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 밝혀 준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해외 체류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 방지 그리고 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까지는 보호 위주의 탈북자 정책이었습니다. 정착 대책의 방향을 이제 자활 중심으로 바꾸어서, 그동안 과반수 이상의 탈북자들의 입국경로를 추적해 보면 한국에 들어오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대가를 지불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좀 줄이거나 방지해 보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정착지원금 2800만 원을 과거에는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임대주택과 함께 1000만 원의 정착금을 주고 이 탈북자가 정착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또한 직장에 취업해서 1년 이상 착실히 근무를 하면 나머지 1800만 원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후불 형식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탈북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 다음에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장관님께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위헌이든 합헌이든 악법이라고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법의 폐지로 외환에 의한 안보 위협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김승규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안보를 중시하십니다. 국가안보를 중시하면서도 인권을 특별히 강조하신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김충환 의원 됐습니다.

50년 전 우리나라는 식민지 수탈과 동족상잔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파괴된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난으로 희망이 없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장관들께서는 현실을 보다 깊이 고려하여 사려 깊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잘 지켜 주시고 장관들께서 대통령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초 우리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출범 6개월째인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정쟁으로 인한 14일간의 국회 파행, 속개된 뒤에도 연일 계속되는 막가파식 정치공세와 인신공격성 발언, 욕설과 조롱, 삿대질이 오가는 난장판,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국민들이 과연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는 서글픔을 넘어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국민들의 선택에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가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새 국회를 건설하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단호한 경고이자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의 여야로 되돌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시, 지금은 국무위원석에 앉아 계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는 회담을 갖고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민생 우선과 경제 우선, 부패정치와의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국회 중심의 의회주의 정치 구현 등 3대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대립과 갈등의 구시대적 정치를 오늘 이 순간부터 한국정치사에서 영원히 종식시키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확고한 실천을

위해서 전례가 없는 대국민 약속 형태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이제 우리 정치도 새롭게 바뀌는구나 하며 뜨거운 갈채를 보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협약이 누구 때문에, 왜 파기되었는지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협약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양당 지도부께 당시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우선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개혁, 즉 민주적인 공천절차와 돈 안 드는 선거는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제 정착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의 고리도 끊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패네트워크의 정점에 있었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대통령님 스스로 권위주의를 해체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소위 4대 권력기관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 의한 표적수사와 표적사정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병들게 했던 관치금융, 사라졌습니다. 이번 카드 사태에서 보듯 오히려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역관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역관치'는 제가 명명해 보았습니다.

사회 역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과거 권력의 통제를 받던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감시를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채 2년도 안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소리 없는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평가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2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소리 나지 않게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경유착의 고리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치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국회도 물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경유착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정부 자체가 정경유착에서 완전히 고리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부패는 정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위주의 시대가 끝난 점도 또한 매우 중요한 점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등권, 이 부분도 3대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 체계는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지금 장애에 부딪혔습니다만 그 문제를 잘 정리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등권도 토대가 갖춰지면서 아주 고질적인 지역감정 문제도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정책 집행으로 사회 갈등이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서 시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시위를 하더라도 이제는 상당히 평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도 서울역 광장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불상사가 없이 평화롭게 잘 끝나고, 주장은 하되 충돌 없이 잘 끝나는 시위문화가 또 한편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서해에서의 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성급 회담도 이루어졌고, 지금 금강산에 1일 관광으로 학생들도 많이 다녀올 정도로 남북 간에 교류도 많이 이루어졌고, 개성공단에 연말쯤이면 제품이 나올 정도로 공단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철도도 곧 개통식을 할 정도로 준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요란하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많이 진도를 나갔고, 북핵문제에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하고 북한하고도 대화하는 기반을 많이 닦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저희가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더 진도를 발전시키고 조금 더 정부 자체 내의 혁신을 하면 비로소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많은 틀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 의원 사실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조용하지만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여정부의 빛나는 성과가 정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이런 사안들이 기본을 닦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를 보여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내수, 국내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체감을 못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 이것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편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서 이런 부분 제도적인 기반이 같이 발전해 갈 때 국민들이 비로소 사회가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더 실질적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신학용 의원 이에 반해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는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행태는 여전히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 20세기에 머물고 있지 않나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가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실종된 의회민주주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자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7대 국회가 문을 연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추진한 개혁정책이 지지부진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야당과 보수세력의 반대나 저항에도 있지만 그에 앞서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위만 앞세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책사안을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받으면서도, 의원님들이 더 잘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를 저도 상황관리를 해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구조적인 비리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큰 사안들이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잘못된 정책들이 잘 발견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여야 간의 갈등이 좀 지엽적인 데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구조적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고 국회에서의 중점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감정적인 데로 여야 간에 대립하고 있고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들은 조금 지나면 이 자체도 큰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는 데로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과도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 전망,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혁의 성공,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당정이 야당을 정치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총리께서 총리인준청문회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오랫동안 여당과 야당, 소수당과 다수당을 두루 경험해 보신 5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국정을 통할하시는 총리로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시원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바로 그런 여야 간에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내년 국회 예산에 정책개발비로 100억을 포괄예산으로 국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정부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정책을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정책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 서로 충분히 토론을 하다 보면 얘기가 훨씬 더 서로 생산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생산적인 활동이 내년부터는 좀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께 호소드립니다.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가는 가출정치, 국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헌법소원 등 정말로 의회주의에 반하는 발언과 행태를 정말 중지합시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께서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이제 그만 하시오'라고 했는데 또 색깔론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색깔론과 결별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가출정치와 색깔론이 결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애국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실종된 우리 의회민주주의 복원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담장 너머에는 경제난에 신음하는 한숨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타협과 협상을 통한 국리민복의 확대와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각 당의 지도부께 제안합니다. 정당의 정책 홍보보다 정쟁의 첨병으로서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대변인 제도의 폐지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지난 12일에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는 대통령에게 격려가 아닌 저주와 같은 독설을 퍼부은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제1 야당의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 필요성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당장 대변인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정쟁과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되어 왔던 대정부질문을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각 당 지도부께 제안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4일간 우리는 그 폐해를 똑똑히 봐왔습니다. 오로지 소모적인 무한정쟁만 있었습니다. 오로지 상대를 죽이려는 필살의 무기만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스스로의 품위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태만 있었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대정부질문 제도의 폐지 아니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때입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제문제협의회의 오찬 연설문에 대해서 혹시 북한 대변인이 아니냐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사실 내용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요지를 보면 "그리고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전 세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생존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왜 북의 대변인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 대통령께서 LA의 국제문제협의회에서 연설하신 것은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또 북한에 대해서도 6자회담에 반드시 참여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국민들에게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북핵문제와 탈북자 입국 문제로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그나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착공식을 가진 이후에 올해 6월 개성공단에 입주할 15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중 13개 업체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력사업을 얻었는데 그중의 2개 업체는 최근에 승인을 얻었지요? 나머지 2개 업체는 바세나르협약의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와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인 EAR 때문에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2개 업체 빼고 나머지 13개 기업은 협력사업 승인이 나서 그 가운데 5개 기업은 현재 공장 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주방 용기를 생산하는 리빙아트라는 기업은 12월 10일경에 최초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제품을 생산해서 서울로 반입해 올 예정으로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 연초에는 제품생산이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박희태 부의장, 김원기 의장과 사회교대)

○신학용 의원 2개는 검토 중에,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정동영 컴퓨터가 부착된 공작기계류 등 이른바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정부 안에 설치된 전략물자 스크린 하는 틀, 시스템 속에서 아직 정밀실사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측과의 협의 절차 같은 것도 좀 남아 있습니다.

2개 기업은 상당히 첨단고급기술이 들어가 있는 업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이것이 바세나르협약 때문입니까, EAR 규정 때문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바세나르협약은 우리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서 거르고 그리고 우리 책임하에 들여보낼 수도 있고, 안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전략물자 반출입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미국의 국내법인 수출통제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가는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법, 수출통제법에 저촉이 되는지 하는 절차를 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면 두 업체에 대한 협의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두 기업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품목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고 보니까 더 큰 문제는 미국의 EAR 규정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업의 피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향후 개성공단과 북한의 다른 지역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올 연말에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을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기업체에서 생산해서 과연 올 수 있겠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연말, 연초까지는 여러 개 기업이, 13개 기업 모두가 내년 초까지는 물품생산이 될 겁니다.

○신학용 의원 따라서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무난히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학용 의원 또한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남쪽 기업이 많을수록—제 지역구라서 좀 그런데요—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두 곳을 연계하는 대규모 종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물류와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서울의 금융, 또 개성이 잘 안착돼서 더 발전하면 개성과 개풍반도를 중심으로 한 제조, 이렇게 금융, 제조, 물류가 삼각형으로 결합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으로 봐도 중국의 푸동지구가 500㎢가 조금 넘습니다만 이 삼각지대는 1500㎢에 달하는, 중국 푸동지구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한반도의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용 의원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다행히 개성과 가까운 인천에 항만과 국제공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경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강화도와 북한 개풍군 간에 연륙교 건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개성에서 개풍반도, 그러니까 예성강과 임진강의 반도 끝에서 강화도를 연결하는 것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성에서 바다까지 20㎞ 미만의 거리이고 그렇게 되면 영종도와도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용 의원 통일부장관께서는 지리를 꽉 꿰고 계십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의선 도로와 철도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동서 양쪽의 도로는 단장이 끝났습니다. 철도는 서쪽, 경의선 쪽은 되어 있고요, 동쪽의 동해선이 내년 가을쯤 돼야 다 됩니다. 개통 행사는 치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 개통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 행사를 치르기 위한 합의는 5분이면 되는데 아무튼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하자 하는 내부적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신학용 의원 또한 북한 철도시설의 경우 너무 낙후돼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횡단철도(TRC)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 문제가 여의치 않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의 철도는 노선의 절반 정도가 일제시대에 설계돼서 설치된 것으로서 침목과 레일에 과부하 위험이 있고, 특히 터널과

교량 침목의 누수와 부식 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북한 철도 실사, 지난 3년여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근 50년 동안 철도시설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터널의 부식과 누수는 30% 정도 진행되어 있고 침목 부식은 80% 정도가 먹어 있어서 평균속도를 20~40㎞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북한 철도의 현대화 그리고 개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6자회담의 참여국들과 함께, 또 국제사회와 함께 컨소시엄의 구성이라든지 재원 조달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학용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횡단철도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뻗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가 북한 철도시설 개선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TSR, 그러니까 Trans-Siberian Railroad 운영 활성화에 국가적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TS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 일본의 물류와 유럽 간의 수송에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있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남·북과 러시아 간에 철도실무회담이 한 차례 열렸고 곧 두 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렇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철도 보수를 러시아가 맡고 대신 우리 정부가 러시아 차관으로—빌려 간 것 있지 않습니까—상계하는 방안도 혹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윈윈이 된다면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통일부장관 정동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인데요, 러시아 경협차관 활용 문제는 철도 개선과는 연계시키기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러시아 경협차관 문제는 2003년 9월에 양국 간에 채무조정 합의를 했고 향후 23년간 분할상환하기로 이미 일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학용 의원 감사합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의 개혁정치 역시 이념의 문제, 특히 색깔론으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마지막으로 원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양천갑 출신 원희룡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순방 중이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국제문제협의회 오찬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다. 북한 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 등등 외교안보라인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연설문과 관련해서는 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걸렀던 내용입니다.

○원희룡 의원 통일부장관께서는 외교안보팀의 팀장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원희룡 의원 이 연설을 사전에 통일부장관께서 직접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연설문 검토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또 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NSC 관계자 등과 함께 같이 검토했습니다.

○원희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통일부장관은 지금 대통령의 LA 연설 내용에 동의하시겠네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원희룡 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 핵은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 본지를 또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의원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가를 묻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외교력을 동원해서 풀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반드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내겠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승인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희룡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내에서 각각 다른 해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현재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까? 정부 당국 사이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 핵을 폐기해야 한다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과 인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지난 1년 9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안보 현안들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 왔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인식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평화적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초점입니다.

○원희룡 의원 이번에 대통령께서의 미국 연설을 보면 견해 차이로 그동안 관측되어 왔던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대놓고 표현하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견해 차이가 물론 조정이 된다면 좋겠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견해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폭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미국 내에도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 정상 간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희룡 의원 미국의 정부 당국, 물론 미국 학계나 정부 외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당국의 입장과 지금 노 대통령과 대한민국 외교 당국이 취하고 있는 거기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증폭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미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작년 APEC 정상회의 또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시장 개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 도입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의 도입이 무엇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은 현재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상품경제로 이행하는 단계, 부분 개혁체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터닝 포인트(전환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격체계를 현실화하고 개별 단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또 배급제의 단계적인 폐지 조치 등 개혁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이 같은 초기 단계 시장 경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격체계로의 복귀, 국가배급제도의 복원, 국가계획의 일원화·세분화 원칙 적용, 또 사적인 경제의 제거

와 축소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원희룡 의원 우리 사회 내부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위협, 그리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이 존재하고 그 간격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이념적으로 또는 선험적인 규정을 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인식의 통일, 그리고 상호 의견의 접근을 위해서는 검증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 그것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방법, 그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원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통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사회·경제적 또 정치적 각종 시험지표들을 개발해서 북한의 변화 속도를 재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에서의 발언을 보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일에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걱정이 더 증폭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모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일관된 전략적 방향을 유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위협 그리고 북한의 변화 여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상반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그것을 통한 우리 국민 내부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조항, 그리고 남북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자는 그러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열린우리당 내에서 제기됐던 대체입법안에도 반대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으로 흡수, 보완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이론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법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와 분석을 세밀히 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짚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형법 보완 방안에 있어서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공작 또는 친북단체의 활동 유형에 대해서 과연 처벌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처벌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와 그에 대한 입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반박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볼 때 현재의 형법 보완, 그 틀에 의해서 북한의 대남공작과 친북단체 활동에 대해서 금지 또는 처벌 장치를 유지하는 데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고, 아니다, 그 개념을 확대·유추 해석하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안보 위해 행위도 잘 처벌할 수 있는 훌륭한 법, 그리고 인권침해도 없고 남용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의원 법무부가 법률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유권 해석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 방안에 의하면 북한 또는 친북단체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북한을 내란단체, 즉 고도의 폭동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고도의 폭동 상태에 있는 내란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폭력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폭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기로 한 이런 마당에 북한을 폭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깊이 검토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 법리를 놓고 깊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님의 해석에 의하면 북한 자체에 대해서 내란단체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내란죄의 예비음모를 통해서 북한의 공작 또는 친북단체 활동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의 안보 위해 행위 유형에 대해서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대부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논지의 주장을 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내란단체로서 고도의 폭동 상태가 맞는다면 이미 기수, 즉 범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한다'라는 예비음모죄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에 이른 범죄에 대해서 예비음모라는 것은 법학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서도 이것이 모순된 적용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법리적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것 같으면 예비음모가 있을 수 없다는 건 법률적인 상식입니다.

○원희룡 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내란단체를 북한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내란은 폭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폭동의 강도에는 이르지 않은 여러 가지의 공작 활동이나 선전·선동 활동 또는 조직 포섭 활동 이러한 등등의 친북단체의 친북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폭동이 전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친북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폭동이 전제되지 않은…… 다시 한번 좀 질문해 주십시오.

○원희룡 의원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한 내에서의 조직 확대 작전 또는 심리전에 의해서 남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겠다, 무장봉기는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런 노선에 의해서 활동을 할 경우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법무부장관 김승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린우리당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법률안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 법률안으로도 아까 그러그러한 유형의 안보 위해 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희룡 의원 예, 국가보안법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관련 규정은 명확성 그리고 구체성을 지녀야 됩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처벌되는지, 그에 대해서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의 국가보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 유형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이것을 내란죄 그리고 내란예비음모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려 할 경우에는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형법에 내란죄 또는 내란예비음모로 모든 북한의 공작 활동 또는 친북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현행 국가보안법에 비교할지라도 죄형법정주의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벌법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대해서 그런 명확성과 구체성이 없다고 본다면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오히려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룡 의원 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견 분열이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 인권침해의 독소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와 화해·협력이 증진된, 그동안에 변화한 현실도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는 "기존의 안보 위해 행위 유형들이 형법의 내란죄로도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약한 해석론으로 이 모든 논란을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것이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유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그러한 법을 대안으로 마련해서 우리 국회의 장에서 토론을 하고,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고치더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대명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계획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헌재가 지목한 기관,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와대 총리실 국회 감사원 등등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행정기관들을 이전한다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재가 지목한 기관들을 빼고 최대한 행정수도 예정지로 이전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우선 답변을 드리면서, 행정수도 이전 소관 주무장관은 행자부장관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련 위원회에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업무 처리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희룡 의원 지금 과천만 해도 지리적인 분산 때문에 과히 썩 효율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물론 주무장관은 아니시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아직 안이 확정되어 있지를 않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후속 기구를 지금 출범시켜 가지고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대략 금년 말까지 안을 한번 만들어 낼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들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안은 과학기술행정도시로 충청권을 발전시킨다는 대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 좋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는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풀어 나갈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그러한 위원회가, 기구가 만들어져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행정자치부로서는 이 기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큰 대기업 사람들이고, 지금 한국은 재무구조가 가장 든든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제발 먹고살게 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기에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은 약 올라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1%, 2%는 약이 오른다고 바꾸고 내리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성장률 1%가 줄어든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 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돈이면 1000만 원 신용불량자 173만 명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1억 원짜리 20평 아파트를 6만 세대에게 공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러한 큰 돈을 허공에 날려 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매를 맞아도 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소비가 경색이 됐고 그래서 성장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올해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작년 10월 25일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5%선에서 약간 밑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결국 성장률 자체도 실제로 중요합니다. 성장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마는 역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체질을 잘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매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기 원희룡 의원의 품격 있는 질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o 의사진행의건

(19시12분)

○의장 김원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 속에서 출범한 제17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막무가내식 비난과 고성, 그리고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원수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한 상궤를 벗어난 태도와 인격 모독적 발언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국회법에 의한 국회 의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던 의장단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의장단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고, 제지, 발언 금지, 심지어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의 권위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12일 금요일, 사회·문화에관한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이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최구식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졌

습니다. 이것이 사회를 보던 김덕규 부의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단상 앞에 나와 항의하였고, 한참 소란이 계속되다가 여야 각 1명씩의 의사진행발언을 거친 뒤 일단 마무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의장께서는 최 의원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정부질문의 취지를 벗어난 연설만 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를 잠시 제지하려 했다고 하십니다.

부의장께서는 우선 최구식 의원을 두 차례 호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이 장내 소란 때문에 못 들었는지 발언을 계속하고, 의장석 마이크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자 부의장께서는 '의장석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내 호명이 안 들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마이크를 넣으세요"라는 발언을 통해 의장석 마이크를 넣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지난 13일 토요일 'YTN 돌발영상 봉숭아학당'을 통해 적나라하게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의 "마이크를 넣으세요"라는 발언이 의사당의 소란과 '마이크를 부의장이 껐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는지 본회의 회의록에는 "끄세요"로 잘못 쓰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김덕규 부의장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국회본회의회의록 정정을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방송 본회의 녹화 테이프와 음성 분석 CD가 첨부되었다고 합니다. 즉 김덕규 부의장께서는 '의장석의 마이크를 켜라'는 뜻으로 "마이크를 넣으세요"라고 했던 것인데 워낙 격앙되고 흥분된 분위기에서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끄세요'라고 잘못 듣고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은 "김 부의장이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나중에 계속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윤리위원회에 제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김 부의장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부의장은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뒤에 그 입장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본회의 회의록과 국회방송 녹화 테이프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일에는 겸허하게 유감의 뜻까지 표명하신 부의장의 충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그날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부의장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덕규 부의장께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자료에 의해 명확히 밝혀진 이상 오해는 이제 그만 풀고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국회를 열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덕규 부의장님이 평상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마이크를 끄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왜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바꾸셨는지 이해가 돼서 '김덕규 부의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세균 의원님 말씀 중에 그날 부의장님이 말씀을 바꾸신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하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던 많은 의원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건대 부의장님께서 워낙 그날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으셔서 비록 그렇게 말씀을 바꾸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마이크가 꺼져서는 안 된다, 의장이 마이크를 끄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마이크를 넣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마이크를 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료 의

원의 발언 중에 마이크를 끄는 이러한 의사 진행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온 김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로, 여야 간에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의장에게 어떤 의사 진행과 관련되어서 요청할 것이 있으면 의장님께 이러이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이 자리에서 참 많은 공방을 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야의 대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의 본질은 여야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총리께서 한나라당을 공격할 때 기분 좋으셨습니까? 박수 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 더 생각하셔서 이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 국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우리 야당 측의 인식 변화, 자세 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지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달 임시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은 훨씬 더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고 실질적인 대정부질문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민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바닥까지 다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더 나은 모습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이것으로써 대정부질문 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상위에 들어갑니다.

다음 의결을 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위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상위에는 자그마치, 의정사에 기록적인 700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앞으로 이 나라의 국가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갈등 구조가 심화된 그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안고 있는 중요한 법안, 또 앞으로 국가의 진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처리하는 상위 과정에서의 여야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당이 제출한 법안이건 간에 그것이 아무리 시대의 진운에 맞고 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국회의 장은 반대되는 의견까지를 같이 수렴하고 용해시키는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의 중심이 국회입니다. 상대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인내력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반대하는 측에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대안 있는 성실한 그러한 반대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 도출에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법안들이 졸속 처리되지 않고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국민여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국민여론을 설득하고 수렴하는 이러한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일 때는 법이 허락하는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단호히 처리할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한다고 하면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능히 합의 도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력과 성의를 가지고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9시25분)

○의장 김원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서면답변서】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권경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新수도권 발전방안은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키는 모순적인 조치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新수도권 발전 방안(8. 31.)은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추진과제로 마련된 것입니다.

※'新수도권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중심, 인천을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 경기도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

－친환경적 관리와 여가·문화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1단계(～07년)로 공장총량제 등 현행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 추진

－2단계(08년 이후)로는 권역개편 등 시책체계를 종합 개선하고 14년 이후 지자체 참여에 의한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 위헌판결에 따라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新수도권 발전 방안의 추진 시기 등 완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추진체계의 일원화 필요

○낙후 지역 개발 사업은 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분산 지원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개발촉진지구), 행정자치부(오지 개발, 도서 개발, 접경 지역 개발, 지방 소도읍 개발), 농림부(농어촌 정주권 개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활력 사업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낙후 지역의 중복 지원 배제 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 공동 추진단 : 균형위, 행자, 건교, 산자, 농림, 문광, 환경, 해수, 기예처 등 9개 부처로 구성(04. 9.)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성 있는 사업을 선별, 조정하여 낙후 지역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 주관으로 사후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제25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2004. 11. 17.～12. 9.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1. 17.(수) ∼ 11. 24.(수)	휴 회(8일간)	○상임위 활동 －예산안 심사 (11. 17.～22.) ○예결위 활동 －결산 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11. 23～)
11. 25.(목) 14:00	1. 안건처리 ※휴회결의	※2003년 결산 등 안건 ○11. 26.～12. 1. (6일간)
11. 26.(금) ∼ 12. 1.(수)	휴 회(6일간)	○상임위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예결위 활동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2. 2.(목) 14:00	1. 안건처리 ※휴회결의	○12. 3.～12. 7. (5일간)
12. 3.(금) ～ 12. 7.(화)	휴 회(5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12. 8.(수) ～ 12. 9.(목) 14:00	1. 안건처리	

○出席議員(286人)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出張議員(2人)

박 진 정의용

○請暇議員(9人)

강재섭 김근태 김홍일 윤호중
이강두 이재오 정동채 정형근
조일현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무총리	이해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통일부장관	정동영
법무부장관	김승규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농림부장관	허상만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	김병일

○出席政府委員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과학기술부차관	최석식
농림부차관	이명수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정보통신부차관	김창곤
해양수산부차관	강무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報告事項】

○議案提出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김영숙·박순자·홍창선·이군현·허천·서상기·이계진·안상수·엄호성·진수희·안명옥·정병국·임인배·박진·이덕모 의원 발의)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김영숙·공성진·김양수·안상수·엄호성·임인배·김문수·서상기·이계진·박혁규·이재오·정병국·배일도·허천·안명옥·김애실·이덕모·정종복·이재웅·주성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

(11월15일 정부 제출)

11월1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刑法中改正法律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이원영·김덕규·오제세·유선호·최재천·김원웅·황우여·이시종·정성호·김태홍·홍미영·우윤근·양승조·송영길·이은영·최용규·김태년·김동철·이상락·심재덕·원희룡·엄호성 의원 발의)

11월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特許法中改正法律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김교흥·이윤성·안민석·이재오·이철우·안상수·임종석·문병호·김재윤·이기우·최재성·조승수·김덕규·김태년·장향숙·최철국·한광원·한병도·염동연·이상락·이호웅·정성호·박순자·김태홍·신학용·송영길·김혁규·조배숙·심재덕·안영근·이규택·오영식·황우여·유필우·이시종·엄호성·이원영 의원 발의)

11월16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파견연장동의안

(11월15일 정부 제출)

11월1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이호웅·박혁규·김맹곤·박상돈·윤호중·이강래·김동철·김기석·조경태·주승용·정장선·이낙연·김교흥·박찬석·곽성문·신학용·조정식·제종길·심재덕·원혜영·양승조·배기선·이목희·박창달·안영근·송영길·김원웅·엄호성·한병도·유승희·신중식·최규성·김문수·김태년·김희선·문병호·이상락·배일도·장향숙·이화영·오시덕·이원영·한광원·정성호·우제창·김영주·임종석·심상정·노회찬·단병호·천영세·강기갑·조승수·권영길·현애자·이영순·최순영·황우여·우원식·김성곤·강성종 의원 발의)

11월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고령사회기본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김춘진·강혜숙·조배숙·김성곤·이종걸·장향숙·이은영·이시종·제종길·임종석·신기남·이상락·염동연·강기정·정성호·문석호·백원우·한광원·김원웅·이재오·김재윤·이기우·한병도·김교흥·한명숙·문학진·장영달·이석현·문희상·최규성·김선미·이화영·유필우·이목희·노영민·심재덕·이호웅·김진표·문병호·유시민 의원 발의)

11월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11월16일 의장 제의)

11월17일
11월24일 (8일간)

○請願提出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63 반도빌딩 2층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로부터 이상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각장애인의운전면허취득제한개선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59-2 청동빌딩 2층 (사)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주신기 외 5855인으로부터 장향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자윤리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이은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폭리제한법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손봉숙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이은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11월1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파산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이은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1월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주택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오제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홍익학원재단비리감사에관한청원

(2004년11월1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81-6 동도빌라 3-301호 정기용으로부터 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포항환여동송골계곡미함대함포사격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여동 124 최일출 외 14인으로부터 이병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제아동문학관건립에관한청원

(2004년11월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동 8-204 한국아동문학학회 회장 이재철 외 20363인으로부터 고흥길 의원 외 9인의 소개로 제출)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